

2022
공생공락을
위한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하여

공생 공락을 위한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함하여

2022.6.24 (Fri)
15:00-17:00
동우아트홀

15:00-15:10 사회 김태형 | 군산대 교수
개회인사 박성신 | 군산문화도시센터장
격려사 강임준 | 군산시장
축사 신영대 | 국회의원

15:10-16:10
발제
1 새로운 삶, 공유를 넘어 커먼즈로
정영신 | 카톨릭대학교 교수
2 도시 커먼즈 운동과 문화공유의 가능성
이승원 |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3 共生共樂을 위한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
박학래 | 군산대학교 교수

16:15-17:00 좌장 박성신 | 군산문화도시센터장
패널토의 및 질의답변
1 공유 개념과 문화도시사업
윤소영 |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군산의 문화도시 비전과 실천
오진이 | 금천문화재단 대표
3 지역문화와 문화공유
원도연 | 익산문화도시센터장
4 군산 현황과 문화도시 실현 정책
김봉곤 | 군산시 문화관광국장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군산시 군산문화도시센터
참가신청 군산문화도시센터홈페이지 <https://www.kunsan.ac.kr/gunsanccc>
SNS <https://www.facebook.com/GunsanCultureCenter>
문의 군산문화도시센터 063-468-0931

문화공유도시를 향한 대장정(大長程)을 시작하며

‘문화도시’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림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는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되어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 아래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 세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왔던 우리 군산시는 지난해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시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공동체의 경험을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인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군산문화도시센터를 열고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문화주체가 되어 일상이 문화가 되는 삶의 장소와 방식을 찾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대장정(大長程)을 시작하였습니다.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사업은 인간이 살며 창출하는 복합적 총체로 문화를 규정하고 이해한 바탕 위에서 시민의 일상문화를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재조명한 지역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를 유·무형의 자산으로 이해하고 공유(sharing)하는 것을 뛰어넘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산, 즉 커먼즈(common)로 문화를 누리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커먼즈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공동체에 속하는 ‘공동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유·무형의 자산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며, 나아가 공동

으로 성과를 분배하는 소유와 생산과 분배의 전 과정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결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도 커먼즈에 포함된다고 이해합니다. 새로운 삶을 직조하는 틀로 이해되고 있는 커먼즈는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어 자원 관리 체계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이자 ‘삶의 방식’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1차 군산 문화공유포럼에서는 군산시 문화도시사업의 궁극적인 방향인 ‘공유’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와 커먼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커먼즈 운동의 필요성과 현황 등에 대해 문화적 접근과 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생공락(共生共樂)을 위한 우리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에 대해서도 시론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열리는 첫 포럼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펼쳐지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군산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시민 여러분이 문화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역할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6
군산문화도시센터

Contents

2022공생공약을 위한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하여

2022 Gunsan City Culture

여는글

문화공유도시를 향한 대장정(大長程)을 시작하며 · 4

제 1 부 주제발표

1 새로운 삶, 공유를 넘어 커먼즈로 정영신 | 카톨릭대학교 교수 · 11

2 도시 커먼즈 운동과 문화공유의 가능성 이승원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 45

3 공생공약을 위한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 박학래 | 군산대학교 교수 · 61

제 2 부 패널토의 및 질의답변

1 공유 개념과 문화도시사업 윤소영 |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88

2 군산의 문화도시 비전과 실천 오진이 | 금천문화재단 대표 · 90

4 지역문화와 문화공유 원도연 | 익산문화도시센터장 · 94

3 군산 현황과 문화도시 실현 정책 김봉곤 | 군산시 문화관광국장 · 100



제1부 주제발표

1 새로운 삶, 공유를 넘어 커먼즈로

정영신 | 카톨릭대학교 교수

2 도시 커먼즈 운동과 문화공유의 가능성

이승원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3 공생공락을 위한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

박학래 | 군산대학교 교수

새로운 삶, 공유를 넘어 커먼즈로



정영신 | 카톨릭대학교 교수
현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 제주대학교 ssk연구단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새로운 삶, 공유를 넘어 커먼즈로

정영신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커먼즈, 이미 우리의 현실

전 세계 20여 명의 커먼즈 활동가, 연구자들이 함께 커먼즈의 비전을 제시한 책,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을 저술한 제이 월재스퍼(Jay Wallijasper)는 ‘북필라델피아의 어떤 정원’이라는 글에서 한 사람의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월재스퍼 편, 2013: 87-92). 월재스퍼가 소개하는 사례의 주인공은 릴리 예(Lily Yeh)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중국 전통 회화를 공부했다. 22세였던 196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석사 학위를 받고 화가로서도 약간의 명성을 얻었으며, 필라델피아 대학 예술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녀가 여생을 보낸 곳은 북필라델피아의 페어힐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의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친구의 댄스 연습실을 방문하게 된다. 그 지역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 결과 마약이 만연한 도심 슬럼가로 전락해 흉물스러운 건물과 쓰레기가 방치된 공터가 즐비한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면서 그들과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주변을 치우고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점차 그녀의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시작한 예술 공원을 중심으로, 과거에 방치되어 있던 120여 곳에 벽화, 조각공원, 모자이크, 꽃밭, 지역사회 정원, 운동장, 공연장, 야구장, 미술 연습실, 나무 농장 등이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재건했고, 마약에 찌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활동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마을은 ‘예술과 인간애가 넘치는 마을’로 불리고 있다. 릴리 예는 마을 프로젝트를 지역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지금은 맨발의 예술가들(Barefoot Artists)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제3세계의 지역사회 활동가들과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¹⁾

월재스퍼가 소개한 북필라델피아 마을의 이야기는 개인들의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헌신 활동이 지역 커먼즈

(local commons)를 만들어내면서 공동체, 도시 공간, 마을의 규범과 문화를 바꾸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찾아보면, 좋은 리더십 하에서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마을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고 바꾸어낸 이야기들은 존재한다. 근대화 시기에는 그것을 ‘새마을’이라고 불렀고²⁾,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협동조합이나 마을만들기라고 불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각의 이름들은 조직의 새로움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생산과 분배 방식을 강조하는 등 초점은 다르지만, 국가와 (자본주의적) 시장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영역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요컨대, 커먼즈는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미래이자 새로운 삶의 양식이지만, 그것은 과거에도 늘 존재했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실의 ‘어떤 것’이다. 그렇다면 커먼즈는 과연 ‘어떤 것’인가?

공유에서 커먼즈로

커먼즈라는 말 이전에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단어는 공유, 공유지, 공유재라는 말이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공유경제, 공유도시라는 말도 널리 유행했다. 우선, 현실에서 통용되는 ‘공유’나 ‘공유○○’의 의미는 커먼즈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실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식 중 하나는 법률이다. 한국의 법률 가운데 ‘공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의 법률이 있다.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유수면’이란 바다(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유란 공유(公有)로서 국유(國有)를 의미한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 재산”을 말하고 있다. 이때 공유란 공유(公有)로서 지자체 소유, 곧 국유(國有)의 일부를 의미한다. 셋째, 대한민국 민법은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항목에서 공동소유(共同所有)의 한 형태로서 공유(共有)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동소유에는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커먼즈를 공유로 이해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소유는 총유(總有)에 가깝다. 공유(共有)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방식이며, 공유자가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소유 형태를 말한다. 합유(合有)는 여러 사람들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이며, 합유자의 동의하에 지분의 처분이 가능한 형태이다. 총유(總有)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이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³⁾

1) <https://barefootartists.org/6800-2>.

2) 박정희에 의해 국가 프로젝트로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 전에, 이미 한국의 여러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의 자치와 협력에 의해 건설되던 ‘새마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것을 발전하고 거기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시켰던 것이다(김영미, 2009).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공유토지’란 한 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중 …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때 공유란 共有로서 共同所有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세 번째 법률인 민법의 공유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률적 용어를 검토해 보면, 한국에서 ‘공유’는 공유(公有)=국유(國有)를 의미하거나, 공동 명의로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공유(共有)를 의미하고 있다. 양쪽 모두 소유권을 중심으로 ‘공유’의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공유경제와 공유도시 개념에서 사용하는 공유의 의미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해 유행한 경제 모델로서, 여기에서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Lessig, 2008). 레식이 정립한 공유경제 개념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간에 관찰되는 교환의 형태로서, 화폐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유대감이나 자기 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혈연이나 지역적 공동체 내의 호혜적인 선물 교환에서도 발견되지만,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커먼즈 영역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개발 과정은 이윤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설정하여 지식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들의 창의적인 지식 생산과 협력 그리고 공유(sharing)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레식이 정의한 초기의 공유경제 모델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대척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커먼즈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경제 개념은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는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Uber)나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Airbnb)와 같은 공유기업들의 경제적 성공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수입된 공유경제 개념은 바로 이 후자의 개념이다. 여기에서 공유경제란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에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이런 의미의 공유경제는 ‘혁신경제’나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다가, 2020년 카카오에서 만든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졌다. ‘타다’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공유경제’로 설명하고 소유에서 공유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혁신’의 사례로 선전했지만, 결국 재판에서의 쟁점은 ‘불법 콜택시냐’ 아니면 ‘기사 딸린 렌트카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유경제 개념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거의 동의어가 되었고, 특히 일반 소비자들을 유휴자산을 가진 공급자로 만들고 그들을 수요자들과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칭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의 공유경제 모델은 서울시의 ‘공유도시(sharing city)’ 모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써 “도시화로 실종된 오랜 전통의 공유문화를 회복해서 서울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제1차 공모사업을 통해 공유도시 사업을 추진할 27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시의 공유도시 사업이 지닌 혼합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업체들은 각각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공유’(1곳), 여행 체험이나 지혜와 지식 등을 공유하는 ‘경험·재능 공유’(6곳), 소셜커머스나 의료

및 자동차 등을 공유하는 ‘물건 공유’(9곳), 작업장이나 유휴공간 및 숙박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간 공유’(11곳)라는 4분야로 구분된다. 업체의 성격을 보면 비영리 법인 1곳, 비영리 민간단체 4곳, 사회적 기업 2곳, 그리고 일반 기업이 20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서울시의 공유도시 모델은 초기의 공유경제 모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한 다수의 주체는 상업적인 공유경제 모델을 지향하는 영리 기업들이었다.⁴⁾ 서울시 역시 서울시의 지원에 따른 공유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공유기업인 쏘카나 대표적인 공유사업인 나눔카의 회원 수가 각각 1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을 거론하고 있다(서울시, 2017).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의 양식으로서 초기의 공유경제 모델은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던 폐기물 처리를 줄이고 공동사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을 장악한 자본이 이 과정을 주도하게 되면 플랫폼 자본주의로서의 공유경제, 자본주의의 또 다른 버전이 될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 내에서의 교환의 성격, 그것이 증여에 기반한 것인지 상품-화폐교환에 기반을 둔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플랫폼을 누가 어떤 목적에서 장악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유 패러다임은 공유 개념의 다의성, 특히 공유경제 개념의 오용과 ‘타다’ 서비스 논란,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혁신 잠재력의 완전한 상실로 인해 차츰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커먼즈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공유 패러다임의 쇠퇴 과정 속에서 출현했으나, 보다 정확하게는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에서의 변동을 조건으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커먼즈 패러다임 부상의 원천들

커먼즈 패러다임 부상의 원천은 크게 보면 학술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학술적 영역에서 커먼즈 패러다임의 부상 과정은 1968년에 하딘(Garrett Hardin)이 발표한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에서부터 시작되며, 엘리너 오스트롬의 종합적 연구로 이어졌다. 오스트롬은 1990년에 발간한 「Governing the Commons」라는 저서(한글판 「공유의 비극을 넘어」)와 그 이후의 연구를 통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커먼즈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방식이 가능함을 증명해 보였다. 하딘이 부정했던 전제, 즉 자원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커먼즈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규칙과 규범, 즉 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오스트롬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4)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공유도시 세부 사업들로는 ‘정보 공유’ 분야에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와이파이 서울, 서울 사진 은행이 있고, ‘사람(재능, 경험, 시간) 공유’ 분야로는 휴먼 도서관 멘토 공유, 서울 e-폼앗이, 대학생 주거 정보 공유, ‘공간 공유’ 분야로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지하철 역사 공간 공유, 시민이 채우는 열린 공간, 한 지붕 세대공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활성화 사업 등이 있고, ‘물건 공유’ 분야로는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인 나눔카, 공유 서가, 공구 도서관, 시립병원 의료장비 관리전환 사업 등이 있다.

했다. 그 여파는 한국에도 나타났는데, 2010년에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뿐만 아니라 오스트롬이 자신의 논의를 지식과 정보의 영역에까지 확대한 「지식의 공유」도 한글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하딘에서 오스트롬으로 이어지는 학술적 영역에서의 논의만으로 ‘커먼즈 패러다임의 확산’을 설명하기 힘들다. 협력적인 제도의 진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오스트롬은 ‘오래된’ 커먼즈 제도들의 ‘유지’와 작동원리는 설명했지만, 커먼즈를 ‘새롭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크게 보면 1980-90년대에 일어났던 다음의 세 가지 사회적 변동이 ‘커먼즈 패러다임의 확산’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과 WWW에 의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연결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식-커먼즈, 정보-커먼즈 운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공동의 지식과 정보를 국가가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개인이 장벽을 치고 독점하는 것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커먼즈라는 말이 도입된 것이다. 오늘날 오픈 액세스 운동, 개인들 사이의 파일 공유시스템, 개방적인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 학술공동체에 의한 아카이브 구축, 위키피디아 등 다중지성에 의한 지식커먼즈 생산 등은 지식이나 문화를 인류 공동의 것으로 인식하는 커먼즈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요인은 1980년대에 제3세계를 휩쓸었던 외채위기와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자연의 사유화와 상품화,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물과 같은 자연 자원과 전기, 도로 등 에너지 자원의 광범위한 민영화는 공동의 부가 수탈되고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17-18세기의 인클로저와 대비하여, ‘뉴 인클로저(New Enclos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뉴 인클로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나 민족공동체, 인류공동체가 지닌 공동의 부(富)를 지키고 확산하려는 사회적 운동이 활발해졌다. 마지막으로, ‘뉴 인클로저’는 특히 도시 내에서 진행되는 자원과 공간의 사유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도시들 사이에서 그리고 도시 내부에서도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었다. 한쪽에서는 구도심의 쇠퇴와 인구의 이탈이 나타나고, 다른 쪽에서는 투기적 재개발과 생활공간의 관광지화, 젠트리피케이션 등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재편에 대항하여 광장, 도로, 도서관, 공원 등이 지닌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거나 골목, 건물, 보육공간, 책방 등을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지키고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의 확산은 도시적 삶, 도시 자체의 전환을 바라는 대중들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커먼즈 패러다임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도시자치운동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유럽 도시들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식민지배와 전쟁 속에서 급속하고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했던 한국에서는 커먼즈와 공유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이나 자치, 대안적인 사회경제에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강렬하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민감한 것이 한국사회이기도 하다.

경의선공유지운동에서 이탈리아의 커먼즈 규약까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커먼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은 이미 우리 옆에 도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감되지 않는 이유는 커먼즈라는 말이 낯설고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커먼즈라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문화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커먼즈나 커먼즈 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매우 척박하고 어렵다. 커먼즈가 어떤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경의선공유지운동의 경험이었다.

경의선공유지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도시 커먼즈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국가 공기업과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에 대항하여, 기존의 철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squatting)하여 공동자원으로 만들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치와 협력을 통해 커먼즈로서 이용하고 관리하려던 운동이었다. 또 경의선공유지운동은 도시 빈민과 난민들, 문화활동가들, 그 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합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커먼즈라는 이념을 도시 개발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하려 했던 운동이었으며, 사회전환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안되고 실험이 이루어지던 현장이기도 했다(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편, 2021). 따라서 경의선공유지운동의 경험과 그 실패가 남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는 커먼즈 진영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의선공유지운동은 2020년 5월에 막을 내렸는데, 그 2주년을 기념하는 최근의 토론회에서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한 활동가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공유지운동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김상철, 2022). 사실 경의선공유지 광장을 만들어낸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정치적 요구에 의해 관철된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지방정부는 지상부 공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이랜드공덕(주)은 이랜드 기업의 계열사가 95%의 지분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이 5%의 지분을 가진 합자회사였는데, 공공기관의 참여는 민간의 개발사업에 ‘공공성’의 외양을 부과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사업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가진 민간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합이나 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제도적으로 박탈되어 있었다.

경의선공유지운동의 경험과 그 실패는 커먼즈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 및 이를 보장하는 제도나 문화의 부재라는 논점을 제기한다. 논쟁과 갈등이 벌어졌던 수년 동안 정부기관이나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시민들이 국공유지를 커먼즈로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경의선공유지를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무슨 ‘자격’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공유지를 이용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고거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관과 민 양측에

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회고는 커먼즈 운동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시민법’이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경의선공유지운동을 동요시켰던 핵심 요인은 (주류 커먼즈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자원-제도-공동체의 역동적 체계로서 커먼즈 내부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국공유지나 공공공간에 접근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의 부재, 커먼즈에 적대적인 제도적 조건 속에서 ‘자격 없음’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상철, 2021; 정기황, 2021). 그리고 곧 이러한 판단은 ‘현대 도시에서 커먼즈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시적인 토대와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현대사회 속에서 커먼즈의 거시적인 토대와 제도적 조건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커먼즈 운동과 커먼즈 규약의 생성 과정이다. 이탈리아에서는 2007-2008년 커먼즈라는 범주를 민법 속에 기입하려는 개정 시도가 있었고, 2011년에는 커먼즈로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요구하는 국민투표가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여러 도시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점거운동과 커먼즈 규약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현대사회 속에서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차원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편적 차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개별적·구체적인 커먼즈와 커먼즈 운동을 어떻게 확산시켰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탈리아의 경험은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주류의 커먼즈 이론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현대 커먼즈의 생성과 작동 과정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나 계급투쟁을 포함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시각을 ‘커먼즈의 정치(politics of the commons)’론이라고 할 수 있다(정영신, 2016; 2020). 커먼즈의 정치론은 커먼즈가 ‘자치와 협력’이라는 차원과 더불어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차원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전자의 차원은 보통 커먼즈를 이해해 온 방식과 동일한데, 즉 커먼즈는 일정한 규모의 공동체가 일정한 범위의 공동자원을 자치적인 규칙과 규범을 통해 이용하고 관리하는 역동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시적 차원만을 보게 되면, 근대 이전의 시대에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커먼즈의 생태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나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커먼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즉, 커먼즈는 ‘보편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⁵⁾

현대사회의 조건 속에서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을 제도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0년대에 공공재의 대대적인 사유화 정책이 시행되었고(1500

5)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이나 인류가 공동으로 물려받은 자원, 공동으로 생산한 재화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커먼즈는 ‘모두의 것’이라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둘째,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는 인간의 생계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들로부터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현대사회의 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발전에 필요한 필수재에 대한 접근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커먼즈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띠게 된다. 즉,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은 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이나 공간의 물질적 형태의 특징 및 그에 대한 주체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규정된다. 그리고 보편적 차원은 인간과 자연의 역사적 관계, 인간의 물질적 생산방식과 그것들을 규정하는 사법적 형식들에 따라 역사적으로 규정된다.

억 유로 이상) 이에 대한 비판적 학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2007-8년에는 민법상의 공공재(=국유재)와 사유재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공동재(beni comuni=commons) 범주를 민법에 기입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위원장을 맡았던 로도타(Stefano Rodotà)의 이름을 따서 법무부 산하에 로도타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보고서가 2008년 4월에 이탈리아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로도타위원회 보고서는 공동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재의 범주에 대한 규정, 즉, 인간의 기본권 행사 및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적합한 기능적 효능(utilitàfunzionali)을 가진 재화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공동재는 법률 체계에 의해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미래 세대의 이익 또한 보장한다. 공동재의 소유자는 공공 혹은 민간법인이 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 법에 의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법의 한계 내에서 공동재의 집단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동재의 소유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해당 공동재는 공공단체가 관리하며, 상거래에서 제외된다.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 양도가 허용되며, 양도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강, 하천 및 그 발원지; 호수 및 기타 수역; 공기; 법으로 규정된 국립공원, 숲과 식림 지대; 고도의 산악지대; 빙하, 만년설; 해안,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변가; 보호받는 야생동·식물; 고고학적 유산, 문화유산, 환경유산, 경관보전지역 등이 공동재에 해당한다. 공동재에 대한 규제는 시민의 이용과 조정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공동재의 보전 및 사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가는 공동재에 초래된 손실에 대해 조치를 취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이익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 역시 국가에 귀속된다. 상기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와 절차는 위임령으로 정한다(로도타 위원회, 2019: 335, 강조는 인용자).

공동재의 제안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공동재의 성격에 대해서 이병천(2018)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전통적인 공(公)과 사(私)의 이원론을 넘어 공동재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2) 공동재를 기본권 실현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필수적 효능을 제공하는 재화로 정의하고 있다. 3) 어떤 자원이 그런 의미의 공동재 범주로 규정된 경우, 법적 소유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공동재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성원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4) 공동재를 보호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편익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 5) 공동재의 규율은 시민들의 사용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누구나 공동재의 보호권 및 사용권의 법적 보호에 접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동재를 “그 효능이 기본적 인권의 충족 및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기능적인 재화”로 규정하

고 있다. 전통 시대에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생계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라는 점에서 규정되었다면, 로도타위원회의 규정은 현대사회의 조건 속에서 보편적 권리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이탈리아 헌법의 이념과 조항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 제3조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모델을 넘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이 국가의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공화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2조는 재산을 사적 재산과 공적 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사회적 기능”을 하는 한에서만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개정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던 법학자인 우고 마테이는 “공동재는 양보받는 것이 아니다. 공동재는 우리 삶의 필수재로서 모든 이에 속하는 자원이다. 모든 사람은 공동재에 대해 평등한 몫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의해 공동재에 대한 평등하고 직접적인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능을 보장받아야 한다”(Mattei, 2012)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커먼즈를 규정하는 것은 (사적 또는 공적일 수 있는) ‘소유권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커먼즈의 권리와 사회적 결속의 충족에 근본적인 재화로서 그 공동체에 의해 커먼즈로 선언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서 특정한 거버넌스 모델에 종속된다는 사실에 있다(Vercellone, 2020: 9).

민법개정운동은 정권교체를 비롯한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입법화 과정에 실패하지만, 그것은 광범위한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공동재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판결에서 로도타위원회의 공동재 개념을 이용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이 공동재, 커먼즈 개념은 2011년 물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투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투표의 성사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인 “커먼즈로서의 물(water as a commons)”은 2010년 12월의 국민투표 제안 시기부터 2011년 6월의 성공까지 수만 명의 활동가들을 동원했고, 그 결과 2011년 6월 12-13일의 국민투표에는 27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물의 사유화와 민영화에 대해 투표자의 95%, 유권자의 54%가 반대한 결과가 나왔다.

공동재=커먼즈 개념은 물 국민투표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확산되었고, 2011-13년에 진행된 도시 공간의 점거운동(occupy movement)을 촉발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볼로냐 시를 비롯한 이탈리아 도시정부들은 물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민의를 실현하고, 점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커먼즈 규약(common regulation)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볼로냐 시는 2014년 2월 ‘도시 공동재 관리와 재생을 위한 시민-행정 협력에 관한 규약(Regolamento Sulla Collaborazione Tra Cittadini E Amministrazione Per La Cura E La Rigenerazione Dei Beni Comuni Urbani, 이하 볼로냐 규약)’을 최초로 채택했다. 볼로냐 규약은 시민과 지자체 간의 ‘협력 계약’ 시스템을 통해 도시 공동재를 공동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⁶⁾. 볼로

6) 볼로냐시 홈페이지에서 이탈리아어 판본(<http://www.comune.bologna.it/sites/default/files/documenti/REGOLAMENTO%20BENI%20COMUNI.pdf>)과 영어 판본(<http://www.comune.bologna.it/media/files/bolognaregulation.pdf>)을 찾아볼 수 있다.

냐 규약은 “이탈리아 헌법 및 시 정관에 따라, 도시 커먼즈의 관리 및 재생을 위한 시민과 볼로냐 시 간의 협력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여기에서 ‘도시 커먼즈’란 “시민과 시 행정부가 참여적이며 숙의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과 집단 복지에 기능적이라고 인식하며, 결과적으로 복지를 위해 활성화되는, 유형과 무형 및 디지털 재화이며, 이탈리아 헌법 제118조 4항에 따라 그 집단적 향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 행정부와 관리 및 재생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는 재화”를 의미한다(제2조). 이때 시민과 시 행정부는 상호신뢰, 공개성과 투명성, 책임성, 포용성과 개방성, 지속가능성, 비례성, 적절성과 차별성, 비공식성, 시민자치를 협력의 일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제3조).

시민들은 일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협력적 사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제안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커먼즈 관리를 위한 활동적인 시민들의 개입이 공정 및 사적인 이해관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 제안은 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시민과 시 당국 사이에 협력 협약이 체결된다. 현재 볼로냐 규약에 근거하여 볼로냐시 내에서 400개 이상의 협력 협약이 만들어졌다. 또한 커먼즈 규약을 통해 공공재산과 공공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은 180개 이상의 이탈리아 도시에서 채택되고 있다(Iaione and de Nictolis, 2021). 도시커먼즈의 확장 과정에서 볼로냐 규약이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볼로냐 규약의 내용과 실행은 도시 커먼즈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볼로냐 규약의 ‘목적, 주체 및 범위’를 다루고 있는 제1조 3항은 “시민과 도시 행정 간의 협력은 ‘비권위적인’ 행정 행위의 채택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새롭고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의 구축이 행정의 변화를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볼로냐 규약은 제4조 ‘활동적 시민’ 항목에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도구이자 공동체의 삶에 대한 참여의 가시적 표현으로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리와 재생에의 개입은 정당화의 필요 없이(without the necessity of any title of legitimation)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볼로냐 규약은 시민들이 도시 커먼즈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자격’을 묻지 않으며, 시민들은 자신이 자격 있는 시민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커먼즈 규약을 통해 드러난 시민과 지방정부 관계의 변화는 적극적인 시민권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의 권한을 시민에게로 이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상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auvêtre, 2016: 135). 또한 볼로냐 규약은 지자체, 시민 및 일반 커뮤니티(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지식인 단체)가 공적이거나 사적인 공간과 자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행정의 협력

7) 볼로냐 시를 비롯한 이탈리아 도시들의 커먼즈 규약 자료에 관해서는 Partecipazione의 홈페이지 참조(<https://partecipazione.regione.emilia-romagna.it/beni-comuni/documenti-normativa/regolamenti-beni-comuni>).

을 위한 일종의 핸드북이자 정부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The Urban Media Lab, 2014).

맺음말

공유 패러다임이 그 개념의 다의성과 공유 개념의 오용, 소유권 중심의 사고와 같은 한계로 인해 쇠퇴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삶을 긍정하는 패러다임으로 커먼즈 사고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커먼즈라는 말은 낯설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치와 협력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사례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도시 공간 안에서도 도시의 광장, 공원이나 숲, 마을도서관, 공공공간 등을 시민들의 자치와 협력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실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커먼즈 운동은 여전히 커먼즈에 적대적인 문화나 제도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지상에서 전개되었던 경의선공유지운동의 경험이다. 경의선공유지운동의 경험은 한국의 법률과 제도들이 자본의 개발사업에는 친화적이지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연합에게는 공공재를 개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이 공공재나 공공공간에 접근하려 할 때 ‘특혜’ 시비가 따라붙거나 ‘자격 증명’에 대한 요구에 부딪힌다는 점을 보여준다. 커먼즈가 더 확산되고 커먼즈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며, 커먼즈가 지닌 보편적 차원에 대한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민법개정운동이나 도시정부들의 커먼즈 규약 제정 과정은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들이 공동의 부를 지키고 돌봄으로써 생계와 생존을 보장받았던 사회적 질서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고, 커먼즈의 생태계를 해체했던 (인클로저를 비롯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커먼즈는 해체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공동재와 필수재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커먼즈를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발상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과 사회적 구성을 앞당겨 올 정치의 새로운 문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철. 2022. “‘우리땅’과 공공성: 경의선공유지에 던져진 소유에 대한 질문들.” 2022 공유도시포럼 커먼즈와 공공성 발표문.
-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 한 마을과 한 농촌운동가를 통해 본 민중들의 새마을운동 이야기」. 푸른 역사.
- 로도타 위원회. 2019. 강민주·이병천 역. “공공재에 관한 로도타 위원회 보고서.” 「시민과세계」 2019년 6월호.
- 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편. 2021.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 박인권·김진언·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29(3): 62-113.

서울시. 2017.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혁신기획관 보고서.

월재스퍼, 제이 편. 2013.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검등소.

정기황. 2021. “국(공)유지, 무엇(누구)을 위한 땅인가?” 박배균 외 편.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 연구 ECO」20(1).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23(4).

Lessig, Lawrence. 2008.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Press.

Mattei, Ugo. 2012. “First thoughts for a phenomenology of the commons.” in Bollier, D. and Helfrich, S. 2013.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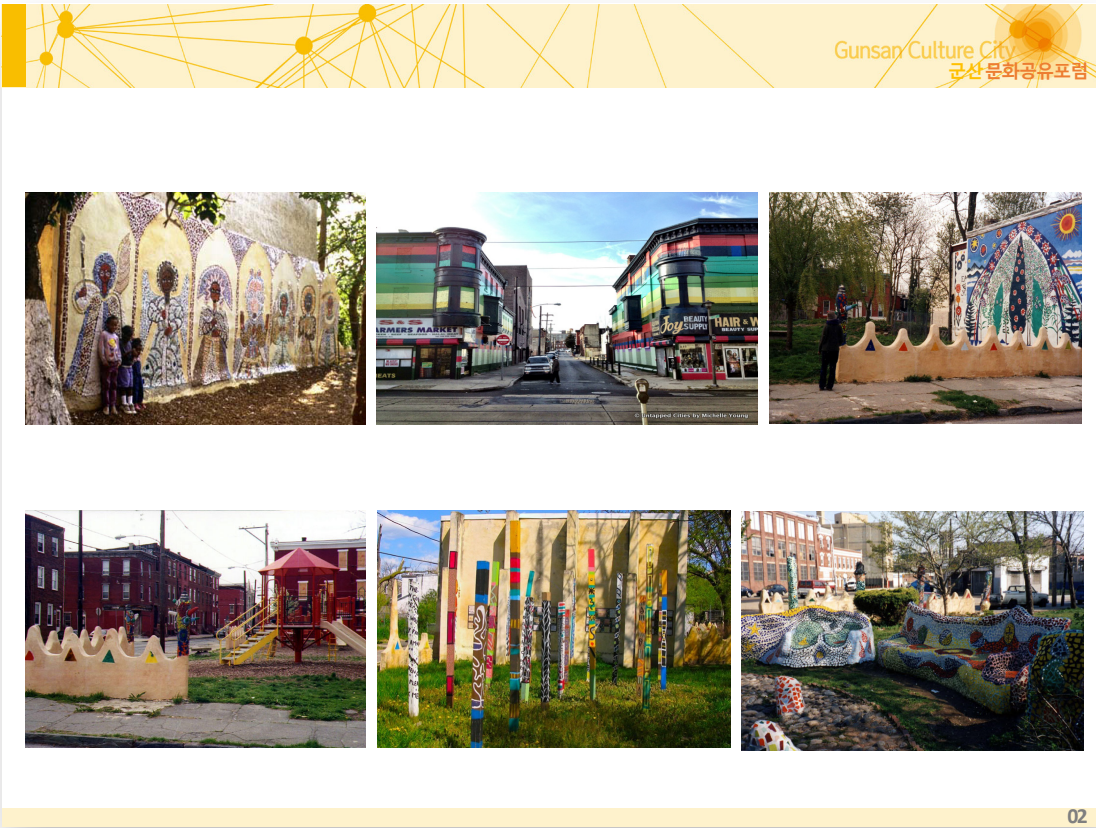
Iaione, Christian, Elena De Nictolis. 2021. “The City as a Commons Reloaded: From the Urban Commons to Co-Cities Empirical Evidence on the Bologna Regulation.” in Sheila R. Foster and Chrystie F. Swine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Commons Research Innov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uvêtre, Pierre. 2016. “Les politiques du commun dans l’Europe du Sud (Grèce, Italie, Espagne).” *Actuel Marx* 59, Premier semestre 2016: 124-138.

The Urban Media Lab. 2014. “Bologna regulation on public collaboration for urban commons.” <https://labgov.city/theurbanmedialab/bologna-regulation-on-public-collaboration> (2022년 4월 25일 검색).

Vercellone, Antonio. 2020. “The Italian Experience of the Commons: Right to the City, Private Property, Fundamental Rights.” *The Cardozo Electronic Law Bulletin, The Cardozo Institute*.







공유 개념의 다의성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公有

국가의 소유

共有

민간인들의
공동 소유

공유하다

함께 이용하다
나누다

07

공유 패러다임 부상의 배경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2000년대 이후 혁신경제, 창조경제 등 세계자본주의경제의 성장 둔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수익 원천에 대한 탐색
-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Uber)와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Airbnb)의 성공
- 서울시의 '공유도시' 비전

| 타다 출범 1주년 현황 (2018년 10월 출시)

이용자 수 (단위: 만명)	차량 운행대수 (단위: 대)	기타
2018년 11월 7	2018년 10월 300	드라이버수 (1회 이상 운행 기준)
2019년 4월 50	2019년 1월 600	재이용률
2019년 7월 100	2019년 4월 1000	9000명 89%
2019년 9월 125	2019년 9월 1400	



06

公有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이란 바다(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 재산을 말한다.

08

共有

공유토지불할에 관한 특별법

'공유토지'란 한 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으로 등기된 토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중 ...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토지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항목에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를 규정하고 있음

09

총유(總有)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현대사회의 총유

문중재산,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

지역공동체의 대표체인 마을회 소유의 재산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나 결사체의 의지를 모아 하나의 공동체, 사단이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11

민법상의 共同所有

공유(共有)

제262조(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合有)

제271조(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제272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4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10

민법상의 共同所有

	공유	합유	총유
인적 결합 형태	공동소유자간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개인적 소유	공동의 사업목적에 의해 다수가 결합한 조합의 소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소유
지분의 처분	각자의 소유 비율(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 동의 필요	지분 불인정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 가능	합유물의 사용은 조합의 계약이나 규약에 따름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사용 수익 가능, 양도 불가능
공유물의 분할청구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분할 청구 가능	합유물 분할 불가능. 조합체를 해산 시 가능.	분할 청구 불가능
공유물의 보존	각자 단독으로 가능	각자 단독으로 가능	사원총회 결의에 따름
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사원총회 결의에 따름

12

공유의 현대적 의미

법률적 용법

- 법률에서 공유의 의미는
公有=國有
共同所有의 한 형태로서 共有
- 共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의 의미를 가져와 공유지, 공유재산 등으로 사용,
이 경우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의미를 지님

사회적 용법

- 공유를 주로 '동사'적 형태로 사용하여 '공유하다'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나누다", "함께 쓰다"는 의미로도 사용
- 특히 디지털 정보를 함께 사용할 때 '공유하다'는 Sharing이나 Commoning의
의미를 지님

13

Sharing과 Commoning

Sharing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맥락에서 사용됨
- 그러나 '공유'경제의 의미는 최초에 제안했던 개념과 이후에 유행 과정에서 이해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
-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

Commoning

- 영어인 Commons를 둘러싼 실천을 의미
- Commons의 구성 요소인 자원+공동체+제도(규칙)을 만들고 유지하는 실천활동
- 소유권을 상대화하거나 불문에 붙이고 함께 사용하는 것

14

공유경제=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해 유행한 경제
모델로서, 여기에서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Lessig, 2008).
- 레식이 정립한 공유경제 개념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간에 관찰되는 교환의
형태로서, 화폐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유대감이나 자기 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Commoning 사회적 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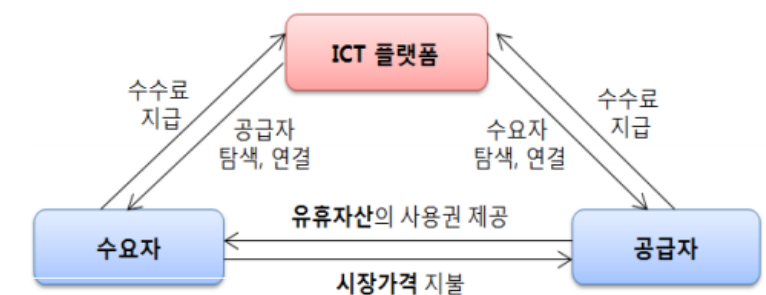
- 혈연이나 지역적 공동체 내의 호혜적인 선물 교환에서도 발견되지만,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커먼즈 영역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개발
과정은 이윤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설정하여 지식을 구획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들의 창의적인 지식 생산과 협력,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대척점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15

Sharing Economy의 의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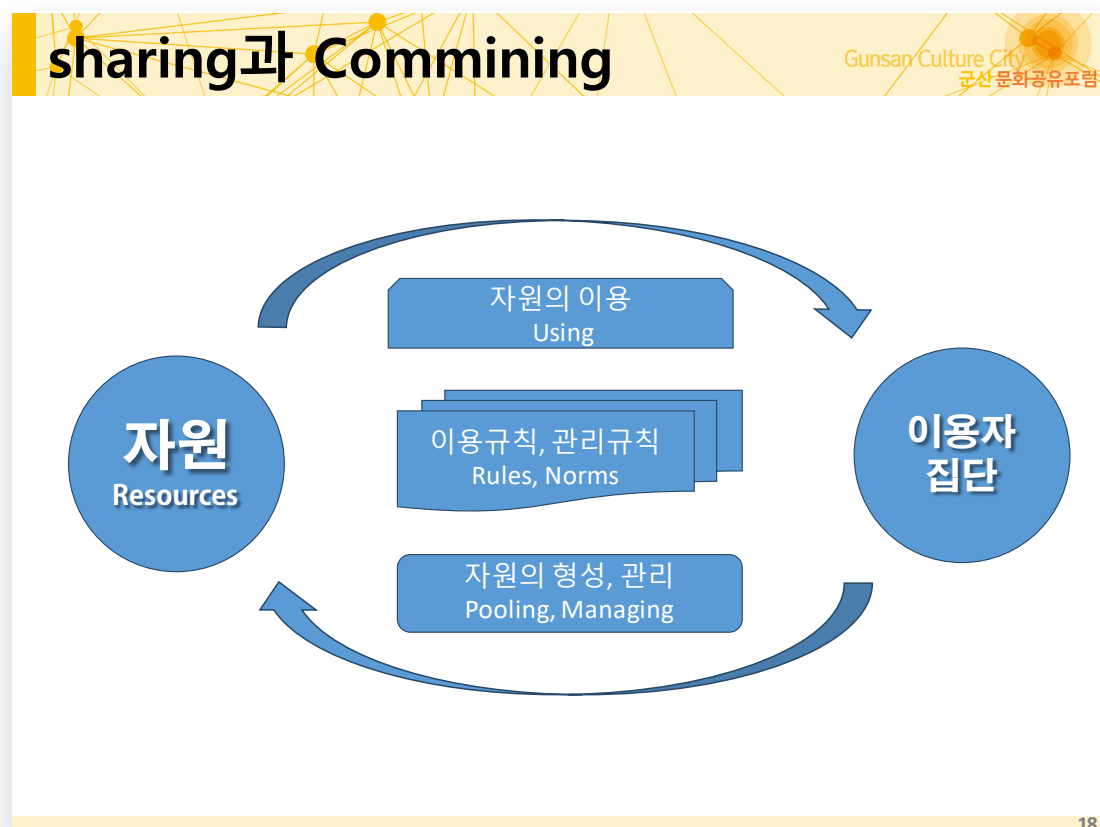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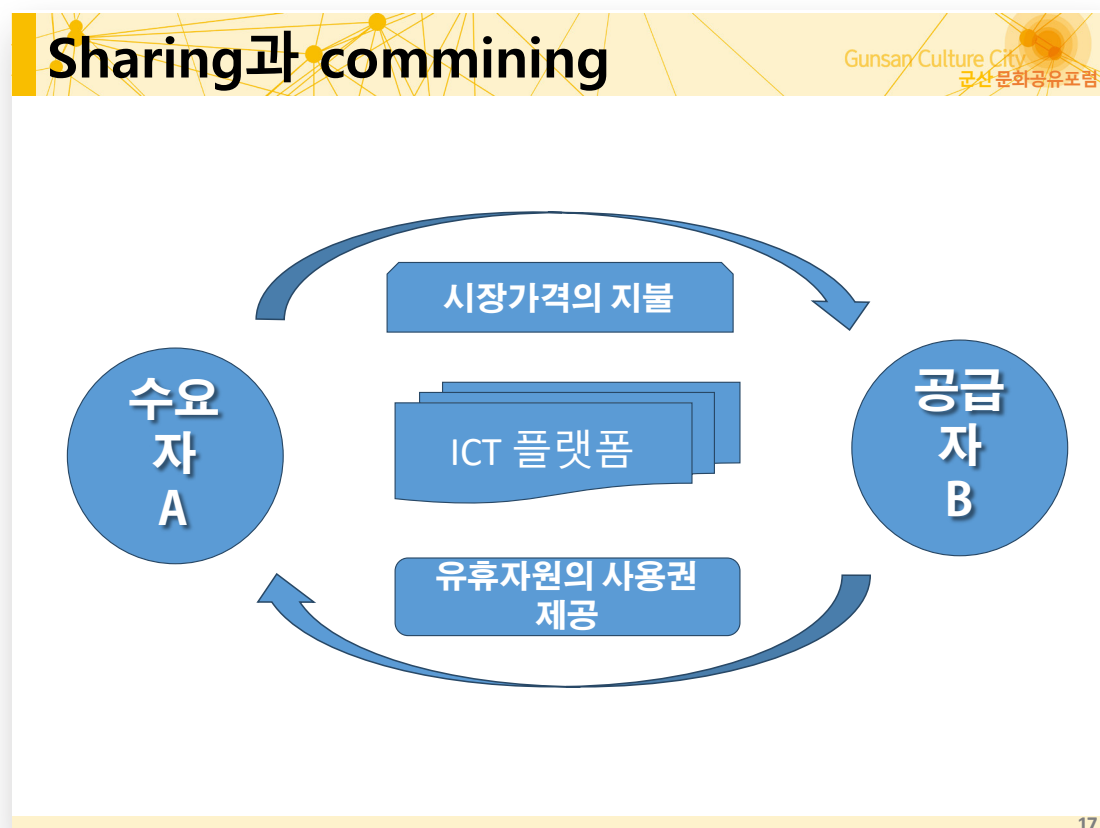
Platform Business?

- 후기의 공유경제는 초기의 의미와 크게 달라짐
- 공유경제란?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희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희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자료: 이수일 외(2015).

16



- ### 커먼즈 패러다임 부상의 배경
- Garrett Hardin의 The Tragedy of the Commons (1968)에서부터 Elinor Ostrom의 Governing the Commons로 이어진 학술적 커먼즈 연구
 -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공유 네트워크 발달 → 디지털 커먼즈
 - New Enclosure: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추진된 물 등의 자연자원과 전기 등 공공재의 민영화 조류와 이에 대한 저항
 - 개발주의적 도시 개발과 도시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고조(젠트리피케이션, 재개발, 부동산경제)
- 19

커먼즈의 종류

자급 커먼즈(Subsistence Commons)

- 전통적인 커먼즈이며 물, 삼림, 어자원, 경작지, 사냥감 등의 자연자원으로서 근대 이전부터 민중들의 생계와 자급의 자원이 되어 온 커먼즈
-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체계의 기반
- 로빈 후드: 13세기 귀족들에 대한 평민(commoner)들의 저항과 숲에 대한 권리



20

토착 커먼즈(Indigenous Commons)

- 전통적 커먼즈이며, 오랫동안 원주민들이 이용해 온 신성한 장소, 문화 지식, 예술적 디자인, 토착 식물, 토착민의 의약적 지식, 토종 씨앗 등을 말한다.
- 토착민의 커먼즈에는 각각의 부족마다 다른 우주론, 문화적 관습이 담겨 있다.
- 자연의 권리?라는 쟁점

생물자원 약탈(biopiracy)

- 현대의 다국적 기업들은 토착민들이 이용하던 약초와 약재에 관한 지식을 가져가 현대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화하여 독점적인 이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21

사회적 시민적 커먼즈

- 현대적 커먼즈로서 시간은행, 혈액과 장기 기증시스템, 학문, 지역공동체 정원, 마을축제, 시민모임, 아마추어 스포츠리그, 친환경 마을, 공동거주, 공동체 지원 농업 등 사회적 협력의 토대가 되는 커먼즈
- 개별 시민들의 기부, 기증, 헌신 등 선물의 교환을 통해 기능
- 현대 도시는 사회적 커먼즈의 토양
- 현대적 커먼즈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현대적 커먼즈는 자본주의적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가?
- 현대적 커먼즈의 경계와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2

국가신탁 커먼즈

- 국립공원, 정부 출자 연구, 국유지, 전파 등 커먼즈 관리에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
- 신탁 관리자로서 국가는 최소 수준의 거버넌스만을 두고 최대한의 투명성, 참여, 관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님
- 알래스카 영구 기금: 주의회가 설립한 독립 신탁기금, 주정부 토지의 석유에 대해 로열티를 징수

글로벌 커먼즈

- 전지구적인 규모의 대기, 바다(북극과 남극), 대양 어자원, 생물종다양성, 인간 유전자 등 전지구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커먼즈
-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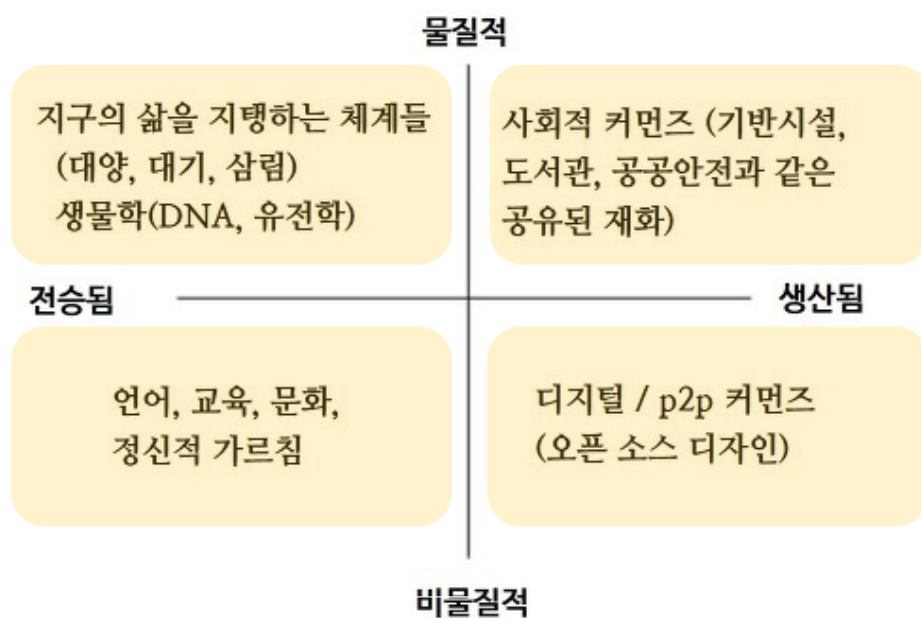
디지털 커먼즈(Digital Commons)

- 1990년대 초반에 사용화된 인터넷을 배경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디지털 자료와 지식 및 지식공유플랫폼(위키피디아), 프로그램(오픈 소스 프로그램, 리눅스), 오픈 액세스 출판 등
- 디지털 지식의 공유 규칙으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일반공중라이선스(GPL)
- 지적재산권을 통한 지식의 독점과 사유화인가? 지식의 공유를 위한 오픈 액세스인가?



24

커먼즈의 유형과 특성



25



경의선공유지운동의 실패와 교훈

- 경의선공유지운동은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경의선 철길 광장을 커먼즈 활동가, 도시빈민, 예술가, 지식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벌인 창의적인 실험 과정
- 그러나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마포구의 비협조와 소송,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항의 등 여러 이유로 2020년 5월에 실험 종료



26



27

이탈리아 민법개정운동과 그 함의

민법개정운동의 배경

- 200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공공재의 대량 매각과 이에 대한 저항
- 민법상의 공공재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로도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4월 법무부에 제출
- 공동재: 인간의 기본권 행사 및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적합한 기능적 효능(utilityfunzionali)을 가진 재화
- 강, 하천 및 그 발원지; 호수 및 기타 수역; 공기; 법으로 규정된 국립공원, 숲과 식림 지대; 고도의 산악지대; 빙하, 만년설, 해안,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변가; 보호받는 야생동·식물; 고고학적 유산, 문화유산, 환경유산, 경관보전지역 등이 공동재에 해당한다.
- 누구든지 공동재의 보전 및 사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9

Commons에 허락과 자격이 필요한가?

공동의 것을 상상하기?

“니들 누구 허락받고
여기와서...”



- 공동의 것(the common)을 상상하는 것의 어려움
- 공적인 것(the public)과 사적인 것(the private), 국가와 시장의 그물망 속에 존재하는 커먼즈
- 자생적이며 자발적인 커먼즈운동과 공동의 삶에 어떤 거시적 기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28

민법개정운동의 의미(이병천, 2018)

- 전통적인 공(公)과 사(私)의 이원론을 넘어 공동재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 공동재를 기본권 실현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필수적 효능을 제공하는 재화로 정의하고 있다.
 - 공동재를 보호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편익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
 - 어떤 자원이 그런 의미의 공동재 범주로 규정된 경우, 법적 소유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공동재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성원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 공동재의 규율은 시민들의 사용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누구나 공동재의 보호권 및 사용권의 법적 보호에 접근할 수 있다.
- 커먼즈의 생성과 확산을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조건들

30

이탈리아 도시정부의 커먼즈 규약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커먼즈 규약 형성의 배경(Commons Regulation)

- 2007-2008년의 민법개정운동
- 2011년 6월의 물 국민투표의 승리: 물 민영화에 대해 투표자의 95%, 총 유권자의 54%가 반대의견 표명
- 2011-2015년에 전개된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점거운동(occupy movement)

볼로냐시의 커먼즈 규약

- 2014년 2월 “도시 공동재 관리와 재생을 위한 시민-행정 협력에 관한 규약” 제정
- 볼로냐 규약은 시민과 지자체 간의 ‘협력 계약’을 통해 도시 공공공간을 커먼즈로 공동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이자, 행정과 시민 간의 사회적 협약

31

커먼즈운동의 다음단계?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한국 커먼즈운동의 난점

- 한국에는 미시적,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자치와 협력에 기반한 커먼즈의 사례들이 다수 존재
- 경의선공유지운동의 경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에는 커먼즈를 보장하는 거시적인 조건들, 문화나 제도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
- 커먼즈의 보편적 기반에 대한 고민 필요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

- 커먼즈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커먼즈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고민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자연이나 공동의 부와 같은 ‘모두의 것’, 필수재와 모두의 것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한 사고 필요
- 민법개정운동이나 커먼즈 규약은 이를 위한 훌륭한 참조점이 됨

32



도시 커먼즈 운동과 문화공유의 가능성



이승원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 칼리지 세계와 시민 강사

커먼즈 네트워크 활동가

(사)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운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국제사업단장

서울 NPO지원센터 운영위원

도시 커먼즈 운동과 문화공유의 가능성

이승원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도시 커먼즈 운동의 필요성과 현황

도시 커먼즈 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윤과 경쟁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로서,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이상 현존 인류가 모두 COVID-19 팬데믹과 그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자 윤리적 가치로 확산되었고, 국가주도 발전주의 전통이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결국 1990년대 말 금융 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질서에 기반한 전체 사회경제적 구조조정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탈규제 및 노동유연화 정책, 복지 재정의 상대적 감축 및 공적 기반의 민영화/위탁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공공성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져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화는 투기적 도시화와 도시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도시 공동체적 삶을 훼손하고 돌봄 기반을 무너뜨려 나갔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활동 등이 전개되었으나, 관 주도 정부 자금에 기반한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민간 위탁 방식이 점차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지배하면서, 이 영역 또한 현재 지속가능성과 좋은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신공공관리). 이러한 과정이 십여 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여러 도시 및 마을 행정 단위에서 민관협치 모델로 복제되면서, 한편으로는 관제화-관료화되어가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관협치의 운영원리이자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운동과 공공성이 훼손되어 가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적 서비스 체계를 공공성의 회복 차원에서 재구축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민간 위탁의 신자유주의적/신공공관리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단기 성과중심을 넘어서서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전달자(중간지원조직) 모두가 공생공락할 수 있고,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일 수 있는 혁신적 모델로의 전환은 시급히 현

실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예술, 영세자영업, 비정규직 및 배달/택배 노동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혁신화되고 진전된 민관협치/민간위탁의 주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험을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동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구는 그 경험을 토대로 복지국가와 관련된 재정 문제와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경쟁 문제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EU와 유럽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 대응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의 현상(좌우 포퓰리즘, 브렉시트, 이민자/난민 문제 등)을 주목해 보면, 신자유주의의 유지도 복지국가로의 회귀도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제3의 길(신자유주의의 수용이 아닌)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서구 사회가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새로운 공공성과 ‘커먼즈’에 대한 구상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전 복지국가의 경험은 이러한 구상과 실천에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지식과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경험 없이, 발전국가 경험과 그 잔재 위에 신자유주의 질서를 중첩해서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발전 경로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보다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는 발전국가의 유산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은 과거 빠른 시간에 산업화를 달성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복지 증진 보다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커져갔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 이후, 민영화, 노동 유연화, 탈규제 등 신자유주의적 특징이 매우 빠르게 한국 사회에 흡수/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외상적 증후(자살율, 실업율, 고용 불안정, 나쁜 일자리, 가계부채, 지니계수, 양극화 등) 또한 심각하게 발생한다.

한국에서 왜 도시 커먼즈 운동이 요구되는가?

201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이념이 퇴조하면서 시장 중심적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지기 시작해왔으며, COVID-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생태-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와 달리 복지국가의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새로이 구축하고 강화해야 하는 큰 과제가 한국 사회 앞에 놓여있지만,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는 이중적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건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커먼즈 체제도 확산하고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한국 사회에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부여된 이중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와 커먼즈 체제가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동시에 촉진하는 관계에 놓이도록 하는 경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공공성 수준이 떨어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복지를 비롯한 더 많은 공공재와 공공자

원을 생산, 공급하는 복지국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 기능의 제도적 강화만으로 현 단계 한국 사회의 공공성 정도가 쉽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발전국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각자도생의 정신이 팽배해있어, 복지국가를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기반한 복지정치가 매우 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와 장소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조직된 공동체 기반의 커먼즈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여 자원과 이익을 공동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먼즈 공동체가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말살된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커먼즈 공동체의 혁신적 경험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질 것이다.

그런데, 자원에 대한 배타적 사적 소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커먼즈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커먼즈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국가가 시민들의 파트너로 나서서 공공재를 시민들의 커먼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커먼즈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사적 활동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규제적 국가(regulatory state)’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여(enabling)’ 시민들의 자율적 공동체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파트너 국가(partner state)’ 또는 ‘파트너 도시’로서의 역할이 21세기 복지국가에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군산 문화 공유(커먼즈) 운동을 위한 방향과 제언

편견을 넘어서 공공성을 위하여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도시 커먼즈 운동의 경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커먼즈 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법제도 상에서의 사유재산권, 국공유지에 대한 비판적이고 새로운 관점, 나아가 이에 대한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화 시켜, 반체제적이고 불법적인 운동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도시) 커먼즈 운동과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사유재산제 철폐와 같은 급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국공유지 관리 방식이 보이고 있는 ‘사적 전횡’의 부분이다. 사적 소유권과 사유 재산이란 개인의 자유의 토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핵심은 사적 소유권과 공적 권위라는 것이 다른 권리에 비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사적 전횡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사적 전횡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국유재 관리와 개발 차원에서 종종 자행하고 있는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몰철학적인 정책과 집행 방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과 가리왕산 개발 사례, 서울역, 영등포역, 경의선 지하화에 따른 국공유지의 상업화 사례 등).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를 제재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로냐,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등의 민관합의에 의한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주체가 정부이면 모든 것이 공공성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모든 정책과 집행방식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인가? 정부가 공공성을 내세우며 추진하는 정책이나 개발사업들이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한다면, 누가 위법자인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위법자로 취급받았다(경의선 공유지, 제주 강정과 제2공항, 용산 참사 등). 국가가 헌법의 가치를 침해한 위법자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법적 제도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가 도로, 도시 기반 구축, 분양정책 중심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공생공약의 가치, 문화적 자산을 향유할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때, 현행법은 모든 이익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사적 전횡을 법원이 방어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

공공성, 그리고 국공유지와 공유재란 기본적으로 시민의 사회적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연합체로서의 국가와 그 대의제적 집행주체로서의 정부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누가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숙의적 과정 없이 이를 특정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전횡하여 전용해서도 안된다. 국공유지/공유재는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한 마지막 물적 보루이며, 공공성은 이를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국공유지와 공유재를 특정한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보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사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시민 기본권, 그리고 포용적인 공생공약의 사회적 삶에 대한 추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성은 사유화와 국가의 전용에 맞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행정가들은 법 내에서만 고민하는데, 사실 우리는 법의 경계를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민주적인 고민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생산과 향유 활동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적 상상을 가장 민감하면서도 예시적으로 해내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커먼즈 운동의 방향

도시 커먼즈란 사적 소유권이 넘쳐나는 세계의 어떤 빈틈에서 무엇인가를 어렵게 창조해 내는 활동과 그 결과라기보다는, 기존 사적 전횡 대상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규칙을 바꾸는, 즉 커먼즈를 커머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이 커먼즈 운동/커머닝의 과정은 관계의 변화, 새로운 주체의 탄생, 수많은 권리 담론이 출

현하고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권위적 주체가 허락하는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나와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우리 스스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관리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관계와 권리의 의미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 새로운 권리 담론의 출현이라 할 수 있고, 창조적 힘이 가장 강력하게 응집되고 폭발하는 가장 문화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을의 일상의 동선, 도시의 리듬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나 자전거 중심으로 거리의 이동권을 바꾼다는 것, 광장이 시민들의 마주침과 창조적 상상의 실천을 위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감과 축제의 장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 힘으로 다시 우리 일상을 공생공락의 터전으로 바꾸고, 이웃이 모르는 익명의 객체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동료가 된다는 것은 가장 문화적인 활동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이, 노약자, 발달장애인, 홈리스, 탈학교 청소년, 이주민, 난민, 사회문화적 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소통의 언어로 만드는 것 또한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도시 커먼즈 운동은 연결성에 주목한다. 물론 연결성은 도시 커먼즈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자유주의 지구화 차원에서, 교육, 의료, 생산, 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클로저를 주도하는 내부의 세력과 글로벌 세력이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신자유주의적 연결성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규범, 윤리, 관습, 의식,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를 더 의지하고, 믿고, 앞으로 우리 희망을 이 신자유주의적 연결성의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 도시 커먼즈 운동은 틈새적이고, 자유롭고, 대안적이며, 공동체주의적인 여러 층위의 다양한 실천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 연결은 어떤 경직되고 불변하는 연결성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와 권리를 환대하고, 그 속에서 점차 변화하고 확장하는 것, 혹은 축소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연결이고 연대이다. 그래서 우정과 환대가 도시 커먼즈 운동에서 중요한 가치이자, 용기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커먼즈 운동의 제약

하지만, 도시 커먼즈 운동이 추구하는 연결성에는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른다. 그 중에서도 앞서 ‘색안경’이라 표현했듯이, 특권화된 사적 소유권의 사적 전횡 속에서 도시 커먼즈와 관련된 운동과 실천들은 대부분 금기시되고, 정부로부터 관리되고, 통제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물론 여러 곳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와 상식에 질문을 던지면서, 점유, 점거, 스캇 등의 독특한 활동을 통해서 시작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례, 제도,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 주체와 권리 담론의 출현은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새로운 근대성 운동, 혹은 탈근대성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약 조건은 개인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 발표자 또한 도시 커먼즈 운동, 문명전환기에 필요한 새로운 대안적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게으르고 일회용품이 편하고, 홈쇼핑하고 싶고, 내 삶 자체를, 내 가족을 설득하기 힘들어하면서,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주체로서 파편적이고 수동화된 개인적인 습관과 욕망에 잡혀 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미 훈련된 커먼즈적 주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 힘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윤리-이데올로기적인 전환, 그리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참여 관계에 기초한 커먼즈적인 사회의 전환을 함께 이뤄내기 위한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제약 조건이자 과제인 민주주의의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커먼즈와 커머닝이 대안적 운동이지만, 이것의 대안성, 민주성, 해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커먼즈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커먼즈는 대부분 남성 권위적인 질서 속에서 여성과 외부인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이뤄져 온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지금도 커먼즈는 ‘누가 함께할 것인가?’의 질문 속에서 새로운 인클로저로서 또 다른 배타성을 위한 논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커먼즈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그것은 폐쇄적이거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빠질 수도 있고, 대안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해방적이고 자유로운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커먼즈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권리 담론의 창조와 함께 새로운 문화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공유(communs)’도시 군산을 희망하며

도시 커먼즈 운동, 문화 공유(커먼즈) 활동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¹⁾가 아닐까 한다. 법적이고 지배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과 장소, 즉 ‘이소토피’는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문화 공유 활동은 이와 같은 이소토피에 질문을 던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헤테로토피아를 찾고, 헤테로토피아를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왜 남녀 화장실만 있는가? 제3의 성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가? 나를 환대하는 화장실은 어디인가? 문화는 헤테로토피아를 만날 때 더욱 문화적이고, 더욱 확장가능하며, 더욱 자유롭고, 더욱 창조적인 힘이 된다. 헤테로토피아가 자유롭게 태어날 수 있는 문화와 그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예시적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주체와 권리의 비전을 상상해보자. 그 속에서 불평등과 차별, 혐오의 현실을 감각적으로 먼저 인식하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스런 현실을 넘어서 수 있는 힘과 기쁨을 감각적으로 먼저 느낄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와 이소토피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1) 미셸 푸코가 정의한 개념인 헤테로토피아는 ‘다른’을 뜻하는 ‘heteros’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os’의 합성어다

뒤섞여있는 문화 공유의 상을 상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불평등과 차별을 숙명적으로 받아드렸던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 숙명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커먼즈 운동이란 새로운 헤테로토피아의 창조와 확장이고, 새로운 권리담론,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담론이라고 본다. 또 이를 통해, 문화도시, 문화공유도시로서의 군산, 그리고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위한 군산 문화공유센터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시민사회운동의 후퇴

- 관제화 및 관료화
- 민관협치 운영원리이자 가치로서의 공공성의 왜곡과 위기

공적 서비스 체계 및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요구 증가

- 신자유주의적 민간위탁의 혁신적 모델로의 전환 필요
-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문화예술, 자영업, 비정규직 및 배달/노동 등 사회 안전망 구축

02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도시 커먼즈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 한국사회: 탈규제, 노동유연화 정책, 복지재정 감축 및 공적 기반의 민영화/위탁화로 사회 공공성 기반 약화
- 투기적 도시화, 불평등, 양극화 심화, 도시 공동체적 삶 훼손 및 돌봄 기반 붕괴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의 시도

- 관 주도 정부 자금에 기반한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계약을 전제로 한 민간 위탁 방식
- 지속가능성과 좋은 일자리의 위기

01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서구의 경우

-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국가의 딜레마 (2008년 이후 폭발)
- 좌우 포퓰리즘, 블랙시트, 이민자 / 난민 문제 등
- 새로운 공공성과 커먼즈에 대한 구상과 실천 확산

한국의 경우

- 복지국가 경험 무, 발전국가 + 신자유주의 질서의 중첩
- IMF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부작용 (자살, 고용불안, 나쁜 일자리, 가계부채, 불평등 및 양극화, 부동산 문제 등)

03

도시 커먼즈운동이 왜 요구되는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재생산 위기

고용불안, 복지기반 악화, 가계부채, 경쟁 심화, 공정성 문제, 교육 격차, 투기적 도시화 등

이중과제

- 복지국가 건설 및 커먼즈 체제의 확산
- 재정 위기 및 중앙 관료주의적 획일화 정책(규제적 국가: Regulatory State)에 대한 커먼즈적 대응
- 자율적 커먼즈 공동체 + 파트너 국가(partner state/city)/도시

04

도시 커먼즈운동의 사례

- 법제연구원 이슈리포트, 국토연구원 도시커먼즈 포럼
- 공유서울 3기 정책 연구
- 화성시 무상버스 정책
- 서울혁신파크 실험
- LH 도시 커먼즈형 사업 모델 및 실행전략 수립
-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미래혁신포럼 인터뷰 아카이브, 웹진 공유도시),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안동대 민속학 연구소(웹진 공생공약), 문화/과학 등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배다리 마을, 성대골 에너지 전환 마을, 공유 대구, 지식 공유연대, 연구자의 집, 공유성북 원탁회의, 공동체 은행 빈고, 마포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서대문 마을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목포 건맥 1897, 고한 마을 호텔 18 번가, 술방울 커먼즈, 지역순환경제, 공동체 돌봄 및 의료(살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커먼즈 네트워크, 참여 예산제 등
- 커먼즈의 도전, 지식을 공유하라, 문화/과학 '커먼즈',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마그 나카르타 선언 등

05



편견을 넘어서 공공성을 위하여

커먼즈운동에 대한 편견과 색안경

- 사유재산권, 국공유지,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접근
- 반체제적이고 불법적인가?

사적 전횡의 문제

- 사적 소유권과 공적 권위의 다른 권리에 대한 특권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공공성의 이름으로, 사적 전횡과 시민의 기본권 사이 충돌

06

공공성이란?

- 정부가 침해하고 시민이 저항하면 누가 위법자?
-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연합체로서 국가와 그 대의제적 집행 주체로서 정부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영역과 가치
- 사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시민 기본권, 포용적 공생공락(共生共樂)의 사회적 삶을 추구
- 사유화와 국가 전용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성

07

도시 커먼즈운동의 제약

- 금기, 관리, 통제 → 새로운 근대성(새로운 주체/권리), 탈근대성 운동
- 파편화된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주체의 욕망과 습관
- 민주주의의 문제(커먼즈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 커먼즈와 민주주의의 결합
새로운 인클로저와 배타성 vs. 해방적이고 자유로운 전환 운동
새로운 주체와 권리 담론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의 확장

09

도시 커먼즈운동의 방향

도시 커먼즈란?

- 사적 소유권이 넘쳐나는 세계의 빈틈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가는 활동과 결과
- 커머닝으로서의 커먼즈 운동
- 새로운 주체와 권리 담론의 탄생
- 창조적이 힘의 응집과 폭발로서의 문화 활동
- 일상의 동선, 도시의 리듬, 시민의 마주침과 창조적 상상의 실천을 위한 연대와 협력, 공감과 축제의 장
- 다양한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되는 것
- 연결성에 주목
- 신자유주의적 연결을 끊고, 틈새적이고, 자유롭고, 대안적이며, 공동체주의적인 여러 층위의 실천 연결

08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희망하며

헤테로토피아를 위하여

-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을 위한
- 새로운 주체와 권리의 탄생
- 새로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군산, 군산문화공유센터

10

공생공락을 위한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



박학래 | 군산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2002~2005)

군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2005~현재)

범한철학회 부회장(2014~2015)

한국철학회 편집위원 (2018~2021)

한국철학사연구회 부회장 (2021~현재)

공생공락(共生共樂)을 위한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

박학래 | 군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문화공유도시’를 향한 첫 발걸음

군산시는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올해부터 계획했던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7만 명에 이르는 군산 시민과 함께 2023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군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예비문화도시사업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향한 것이지만, 그 기초에는 배타적인 경쟁과 이에 따른 갈등이 난무하는 현재의 도시 문화에서 벗어나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공유도시, 군산’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을 현실화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예비문화도시사업은 공생의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능동적인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군산 시민공동체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생공락’¹⁾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살면서 같이 즐겁’이다. 말 그대로 ‘함께 하는 삶, 함께 하는 즐거움’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군산 문화도시사업이 추구하는 ‘공생공락’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시장 체제, 특정 집단의 지배와 독점 등 시민의 삶을 저해하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들이 삶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공정을 기초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생공락이라는 지향성을 가진 군산 문화공유도시 사업은 지속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한 「군산 비전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군산시의 다양한 발전 계획 등과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군산 시민의 내재적 발전 의지를 담아 2023~2027년²⁾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그 계획을 준비하였다. 군산 시민 모두를 문화 주체로 발굴하여 ‘일상 모음과 가치

1) 공생공락이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인 장 앙텔므 브리야 사바랭(Jean Anthelme Brillat-Savarin, 1755~1826)이 「미식 예찬(Physiologie du goût)」에서 사회에서의 중요한 유대를 표현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농담을 나누며 노는 즐거움을 뜻하는 공생공락은 이후 이반 일리치(Ivan Illich, 1926~2002)가 이윤을 목적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에 집중하는 시장 체제, 전문가 집단의 지배와 독점에 저항하는 대안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체계화하였다. 군산시가 표방하는 공생공락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일리치에 의해 구체화한 개인의 자율성 확대, 창의성 증진, 자원과 도구의 공평한 분배 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2) 2022년은 예비 문화도시 단계 사업 기간임.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2022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군산이 당면한 현안을 문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적 움직임을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산 시민 스스로 내재된 문화적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연결함으로써 통합적 도시재생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2022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

계획의 수립

현재도 일반인에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근대도시로 각인되고 있는 도시 이미지가 새만금 산업도시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는 농촌과 어촌,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경관을 가진 도농복합도시인 군산시, 세계사적 문제 상황과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현안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한 지금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군산 시민. 이와 같은 문제적 현실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2022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으로 약칭)이라 할 수 있다.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한 기본 열개인 조성계획은 2020년부터 준비된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전보다 면밀한 군산시의 현황 조사 및 분석,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군산시가 담지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나아가 고립된 문화 잠재력과 분산된 문화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문화적 힘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협력이 더해지는 민관협치를 통해 추진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성계획은 그동안 군산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그 잠재적 가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확산과 공유를 이루어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문화를 발견하고 발명하여 군산 시민의 자존감과 긍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군산시가 축적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을 문화도시의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과 문화 재생이 공진화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 다양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군산 시민의 의견과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성계획 입안 단계부터 지역 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제한적일 수 있지만, 1천여 명을 상회하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시민 원탁, 포럼, 문화추진단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도시 비전과 구체적인 비전 및 핵심 가치 등이 설정되었다.

협업적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를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창출하는 복합적 총체로 이해하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회복의 의지를 존중해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삶을 추구하며, 획일적 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상 문화를 통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재조명한 가치를 나누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에 따라 계획

의 비전은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는 핵심 가치로 시민 누구나 문화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自)’, 문화주체가 연결되어 문화공동체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공(共)’, 그리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이라는 ‘공(公)’을 제시하였다. 또 핵심 가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상 문화·문화 일상을 통한 ‘문화 역량 강화’, 문화 공감·문화 공유를 통한 ‘문화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 협치’를 제안하였다. 조성계획은 이러한 비전 및 핵심 가치, 그리고 핵심 전략을 통해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시민 스스로 문화적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일상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접근방법을 비롯하여 성과 중심적, 하향식 행정 주도, 특정 지역과 시민의 제한적 참여에서 벗어나 과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결과가 산출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나아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 되살림을 뜻하는 재생의 원론적 의미에 주목하여 지역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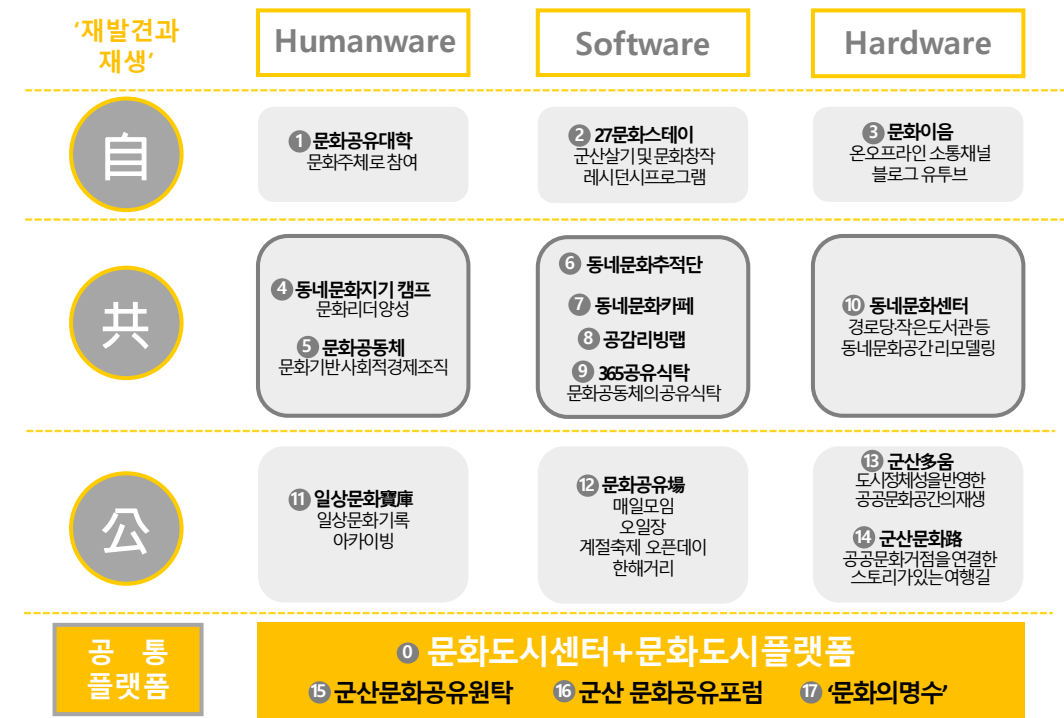


[그림 1] 군산 문화도시 사업 비전 체계도

세부사업 구상

문화공유도시를 지향한다는 전제하에 자(自)–공(共)–공(公)개념을 적용한 단계별 사업을 구상하였다.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휴먼웨어–소프트웨어–하드웨어로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총 17개의 주요 사업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17개의 주요 사업을 통해 군산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질적인 문화공동체는 군산시라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은 단위의 동네를 중심으로 ‘문화공유 우리 동네’를 구성하고, 이러한 문화공동체가 종횡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문화공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구성을 구상하였고, 이러한 구상을 군산시 문화공유사업의 특성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에서 출발해 동네를 연결한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군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로 ‘공간+문화+사람’이 어우러진 문화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특성화에 기초한 문화도시 전략인 셈이다.



[그림 2] 세부 사업 구성도

특성화사업은 축적된 문화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 활동을 동네 주민 대상 돌봄과 연계하고, ‘동네문화센터’, ‘동네문화지기’, ‘동네문화추적단’, ‘동네문화카페’ 등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네 단위의 문화공동체 형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 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1]과 같이 사업은 전체 비전 체계 및 사업구성과 마찬가지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유기적 결합을 바탕으로 동네 문화생태계 구축, 동네 문화 브랜드 형성, 지속적인 동네 발전을 이루어 가며 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 특성화 사업 추진방안

목표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
동네문화 생태계 구축	동네문화 운영체계 구축	[H] 동네문화지기	우리동네사업 총괄 지원	매년 27명
	동네문화 인재양성/지원	[H] 동네문화지기캠프	동네문화지기들의 학습공동체	월 1회
동네문화 브랜드 형성	동네 가치 발굴 · 활용사업	[S] 동네문화추적단	동네의 인적/물적 자원과 기회 발견	매년 20명 (10팀)
	동네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S] 동네문화카페	동네 취향 · 경제 공동체, 시민클럽화	1기 당 500여 개 (3기/년)
지속적인 동네발전	동네혁신 및 경제활성화사업			
	동네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H] 동네문화센터	동네 문화공동체의 거점공간	총 27개 ('22~'27)

사업유형의 구분 : [H] 휴먼웨어 [S] 소프트웨어 [H] 하드웨어

거버넌스 수립 및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목표로 한 군산 문화도시사업은 시민이 문화주체로 참여하여 문화공동체 구성을 통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와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구성이 필수적이다. 조직 체계 구성은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화주체로 활동하는 시민과 함께 행정을 담당하는 군산시와 행정협의체, 공식기구인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각종 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 간 구성된 도시네트워크가 군산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추진

총괄적인 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구상을 기초로 현재 군산시는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문화공유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지역 가치 생성 및 시민 삶의 의식 변화 등이 예비문화도시사업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문화도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문화도시 사업은 지자체가 마련한 7억 원 예산 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전략을 정교화 하는 등 사업 계획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거버넌스 육성과 관련하여 문화주체로서 시민의 발굴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주체인 시민이 사업 추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군산시의 도시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법정문화도시와의 네트워크 확립 및 교류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비문화도시사업은 본 문화도시 지정과 연동된 것이다. 따라서 예비문화도시사업은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문화도시사업과 함께 지속하여야 한다.

문화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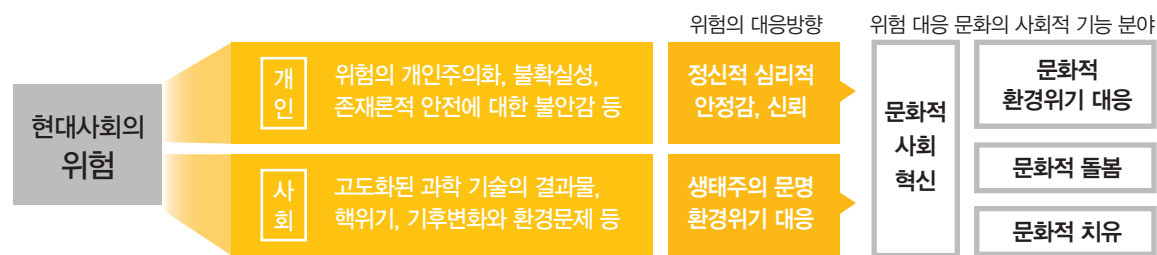
군산이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

앞서 밝힌 대로, 우리 군산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는 ‘공생공락’을 향해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지향한다. 문화주체로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공동체로 문화주체를 잇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문화 협치 체계의 완성을 통해 군산다운 문화도시를 이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 지향점이 문화공유도시라는 점에서 이후의 군산시에서 펼쳐지는 ‘문화’ 관련 모든 사업은 ‘공유’라는 가치를 전제로 추진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군산의 문화도시사업이 ‘문화’와 ‘공유’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추진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돌파하는 중심 매개가 문화이어야 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공유’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상시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은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대응도 사회적이어야 한다. 파편화되고 고립된 지역 사회의 개인은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감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은 사회구조가 불러온 신뢰 관계의 변화가 결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개인화, 소외 등 병리적 현상을 해결해 줄 긍정적인 가치로 재현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자기 개방의 상호성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이고, 사회구조가 불러온 위험을 해소할 가능성이 큰 새로운 사회적 결속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산 공유도시가 추구하는 문화공동체는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존재론적인 불안, 안전의 불안정성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대응으로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매개는 ‘문화’이다. 문화의 특성은 소통이고,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징체계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문화는 자체로 고유 가치를 가진다. 문화는 효용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본적 가치도 가진다. 우리가 인권 중 하나로 문화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며, 문화는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해야 한다. 문화의 축적된 이미지는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문화는 소통의 가치를 가짐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고 발전시킨다. 문화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는 공공재로 바라보아야 하고, 문화정책도 공공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에 따라 군산 문화도시사업에서 문화는 심미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을 포괄하면서도 문화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위험이 일상화되고 현대사회의 위험이 증첩된 지역사회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매개로 문화의 사회적 기능, 즉 문화적 돌봄, 치유, 그리고 위기 대응을 통해 문화적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적인 사회 변화는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참여, 문화를 활용한 지역 문제해결, 문화 다양성의 가치 등을 실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적인 사회 변화는 지역 사회 내에서 시

민의 참여 및 주도성을 높이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문화의 일상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쉬우며 지역 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와 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 변화는 시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 시민 개인이 원하는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유기적 사회관계가 더욱 쉽게 맺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인적 관계망이 없는 이주민에게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망 형성이 쉬워지고 지역에 정착하기 쉬워진다. 물론 기존 시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강화된다. 다양한 문화자원 또는 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 내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낙후 지역의 활성화와 공동화된 도시의 재생은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역경제 진흥으로 이어져 이미지 개선 및 지역 브랜드 창출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문화가 가지는 특성과 지역 변화의 매개체로서 문화의 힘이 크다는 점은 지역 사회에서 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되며 바로 이 점이 군산이 문화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3] 문화의 현대적 기능
(출처 : 전북연구원(2022),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군산이 ‘공유’에 주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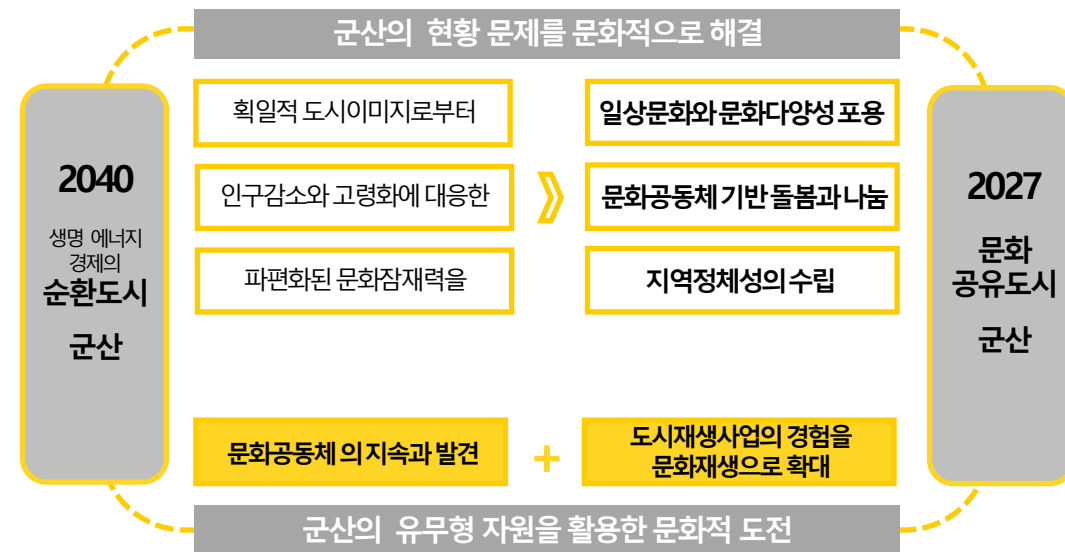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문화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공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공유될 때 비로소 그 의미와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나눔(sharing)이라는 차원에서의 공유(共有), 자율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문화 생태적, 공존의 공동체적 전망으로서의 커먼즈(common)가 그것이다. 논자에 따라 그 개념적 정의가 다르지만, 공유와 커먼즈는 모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다. 공유가 이러한 일종의 도덕 감정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타인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커먼즈는 공생공락의 가치를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제까지의 삶과 다른 경로를 제도권 안팎에서 만들어가는 자율과 협력의 결사인 동시에 탄력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위험의 일상화 현상 속에서 현대사회의 개인은 수동적이고 객체화되고 있다. 또 파편적인 개인으로 고립된 시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면서 삶의 방식을 설계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노출되었고, 시민사회의 약한 모습, 공공재 기반의 취약성 등이 심화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적 모색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일상화, 저성장 기조 등 산적한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공유이고 커먼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를 위시한 국내 도시들은 2010년 초부터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공유’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고, ‘공유’에 대한 의미 재구성을 통해 나눔으로서의 ‘공유’(sharing)를 넘어 새로운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커먼즈’(commons)로의 이행을 가시화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포용성, 자원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라는 개방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차등성, 수평적-다중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자원순환과 공동생산을 위한 연결과 협력 수준에 주목하는 상호연결성을 추구하는 도시 커먼즈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공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이 공동의 가치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타자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 문화를 형성하는 실천이자 체계인 문화 커먼즈(cultural commons)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커먼즈의 장점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군산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문화공유를 핵심에 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단순히 나눔을 넘어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은 나눔으로서의 공유와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커먼즈여야 한다고 파악한 것이다. 나눔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유(sharing)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한 ‘삶의 방식’, ‘윤리와 내적 감성’ 등을 포괄하는 문화 커먼즈로 확장되어야 군산이라는 도시가 경쟁과 갈등을 넘어 포용과 연대로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는 완결적 도시로 재구조화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문화공유도시’ 군산

문화공유도시를 표방한 우리 군산시의 문화도시사업은 기본적으로 군산의 현실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방법론적 통로는 공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로부터 일상 문화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로의 전환,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도시 소멸의 문제를 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과 나눔으로 돌파하자는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파편화된 문화 잠재력을 지역 정체성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통합하고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림 4] 군산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

문화공유도시로의 발걸음이 무겁지만, 군산시는 차분히 한걸음 한걸음 문화공유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문화공유를 향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이끌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 참여에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제고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돌출할 수도 있다. 이른바 집합행동의 문제라 불리는 사적 부당이익의 취득, 나아가 공동자원인 문화 활동에 대한 경쟁적 부추김 현상, 그리고 일방적인 반발 내지 부정의 태도가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를 돌파하여 흔들리는 현재의 삶을 미래에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가는 데 문화공유의 발걸음이 적실한 하나의 통로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예비문화도시 선정과 공생공락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예비문화도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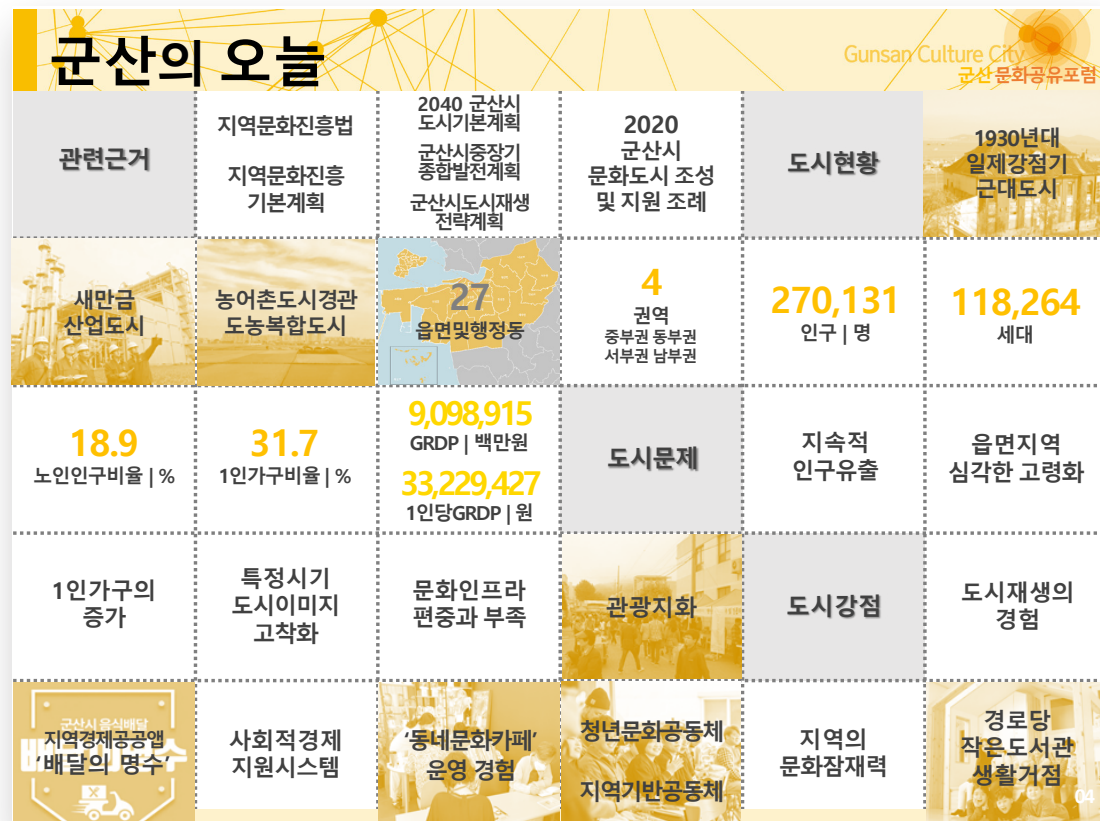
-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
- 올해부터 예비 문화도시 사업 진행 중
- 군산시민과 함께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 시작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공유도시, 군산'

- 공생공락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살면서 같이 즐김'.
-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즐거움'
- '공생공락'은 시민의 삶을 저해하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들이 삶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 나아가 공정을 기초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

01





군산 문화공유도시 사업 구상

Gunsan Culture City
군산문화공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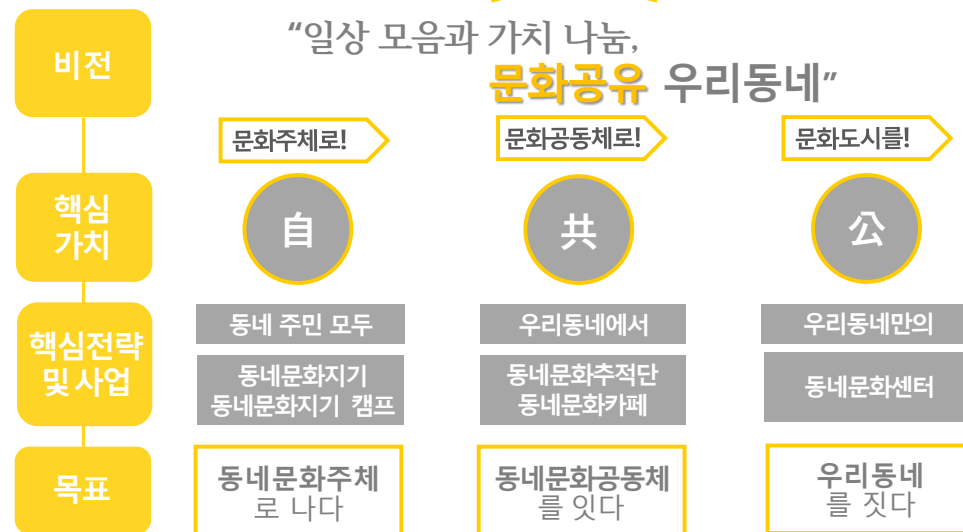


특성화사업 계획

Gunsan Culture City
군산문화공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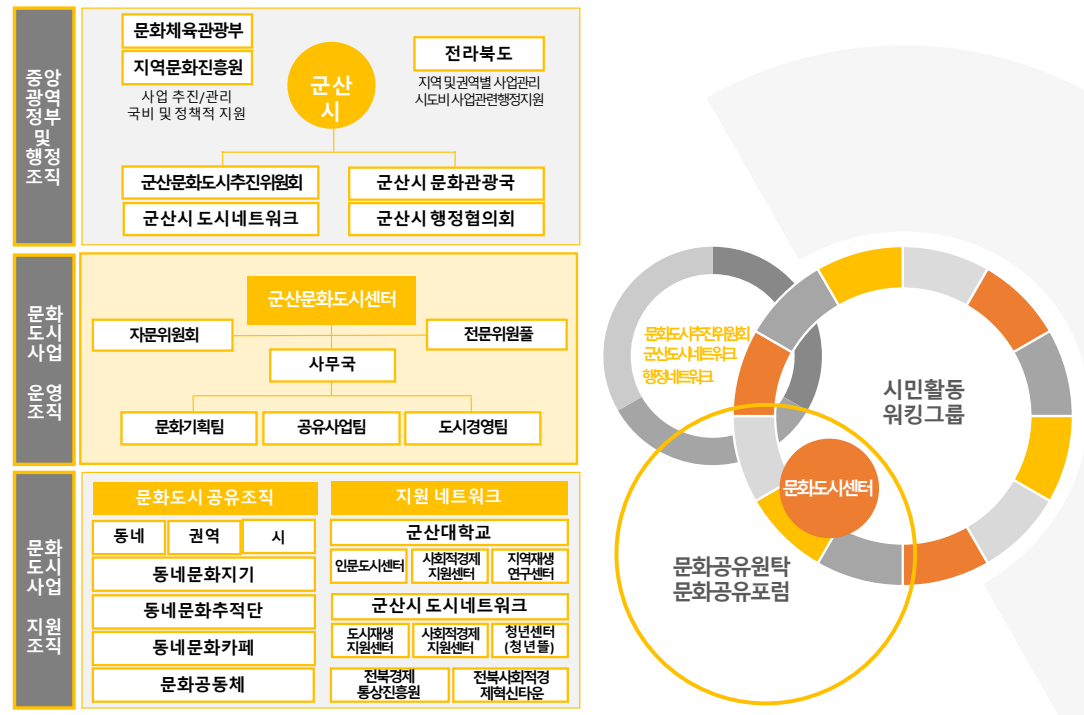
문화공유도시, 군산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 우리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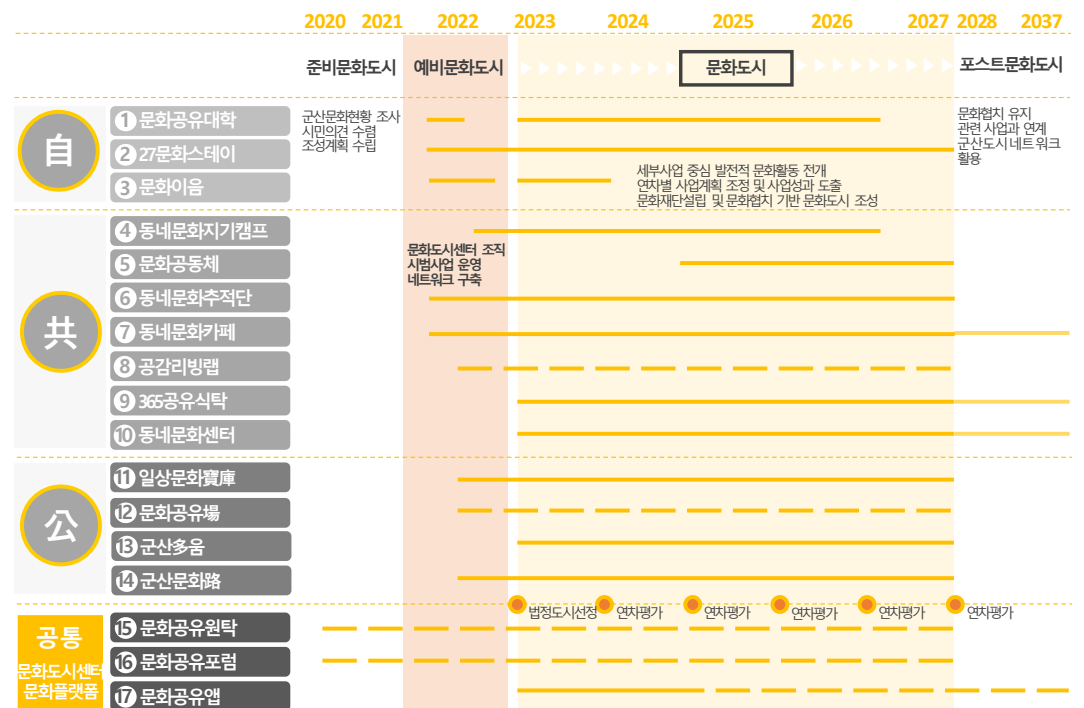
08

거버넌스 체계



문화도시사업 추진 로드맵

Gunsan Culture City
군산문화공유포럼



2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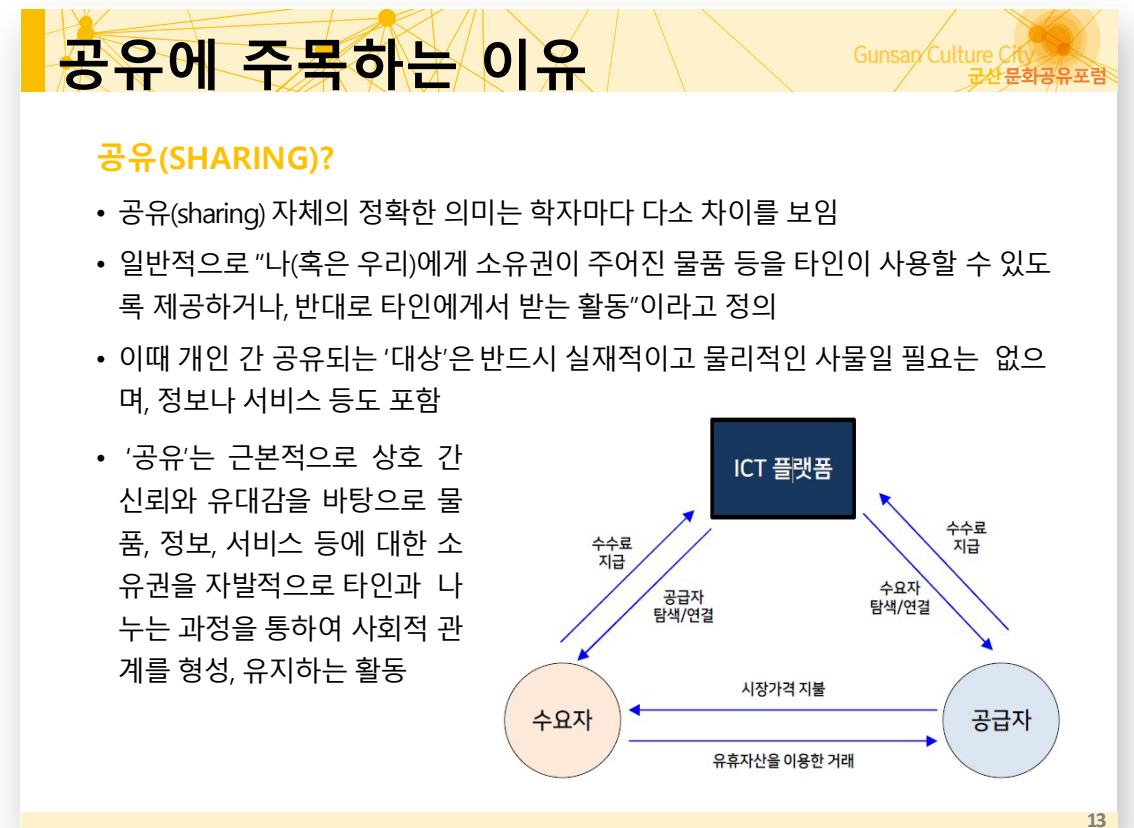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

왜 문화인가?

- 문화 자체로서의 **고유가치**
문화는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와 무관하게 존재 그 자체, 즉 '아름다움(美)'이라는 실존적 가치가 있으며, 창조성 또한 문화의 고유가치 중 하나
- 문화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본적 가치**를 지님
인권으로서 문화권을 강조하는 이유이며,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
- 문화의 축적은 **지역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
풍요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도 축적된 문화 이미지의 중요한 가치
- 문화는 **소통의 가치**를 가짐
문화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치가 있음

문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문화는 공공재로서 문화향유 정책의 당위성 지님

11



커먼즈(COMMONS)?

- 커먼즈는 **시민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자원을 생산 관리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생적 공동체**
- 커먼즈에는 공통의 유무형 자원 혹은 '공통의 부(common wealth)'가 존재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둘러싼 성원들, 즉 '**커머너(commoner)**'들과 이 공통의 부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나누며 재생산하는 그들 자신의 '**공동체**'
- 공동체 개념에서는 다수의 커머너들이 맺는 **정서적·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며, 공동체는 커먼즈를 (재)생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행하는 커머너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커먼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의 자원을 매개해 새롭게 공생의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수탈에 맞서려는 대항의 구체적 방법론**
- 커먼즈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발과 수탈을 벗어난 **호혜의 자원 공동체**를, 굳어진 공통의 자원을 관리하는 수세적 입장보다는 커머너들의 **평등주의적 관계**를 통해 기존 자본주의적 독점적 소유를 넘어서려는 조직 행동

14

문화 커먼즈

문화 커먼즈(Cultural Commons)

- '시민이 공동의 가치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타자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 문화를 형성하는 실천이자 체계'
- 커먼즈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자원의 내재적 속성 뿐만 아니라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공동으로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한 동료 시민들의 실천 과정을 포함

공통자원 common resources	시민력 civic activity	공동감각 commonsense	협치 governance
전통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콘텐츠 문화시설	시민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단체 조직 주체적 활동	관점 태도 가치관 사회미학 사회적윤리	규칙 법제도 협치조직 협치활동

커먼즈 COMMONS

커머닝 COMMONING

16

도시 커먼즈

도시커먼즈(Urban Commons)가 추구하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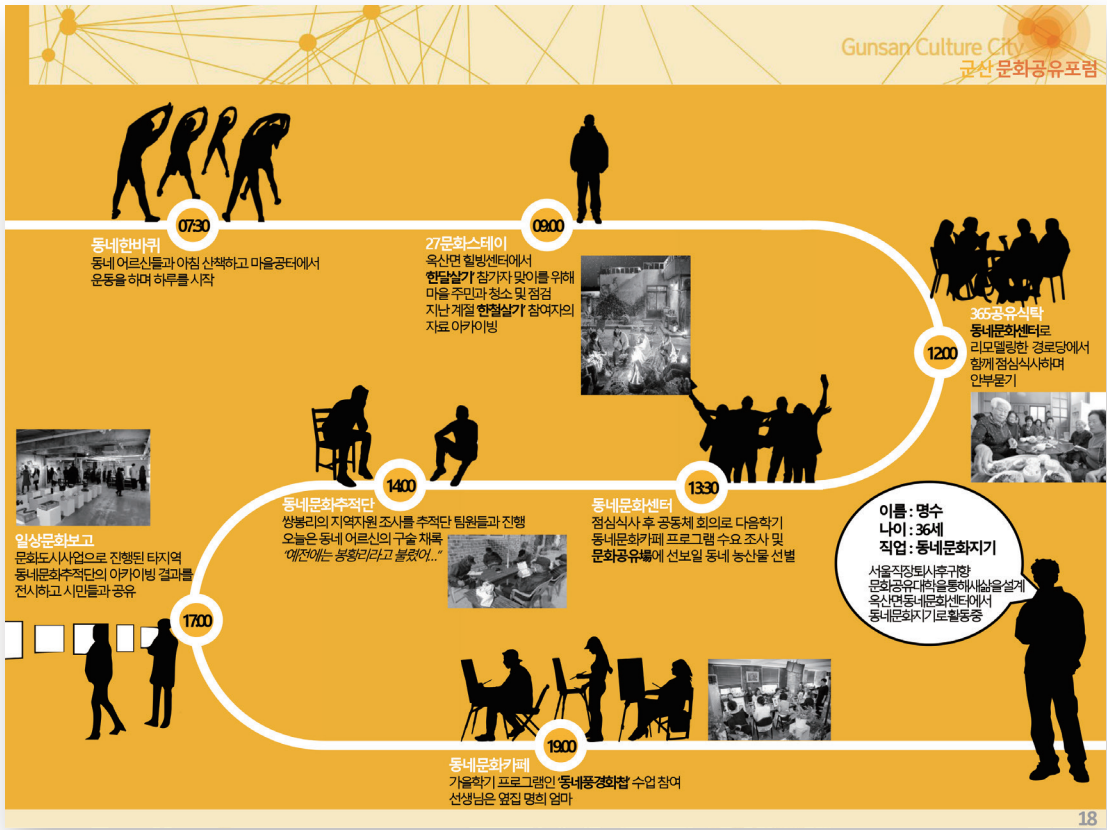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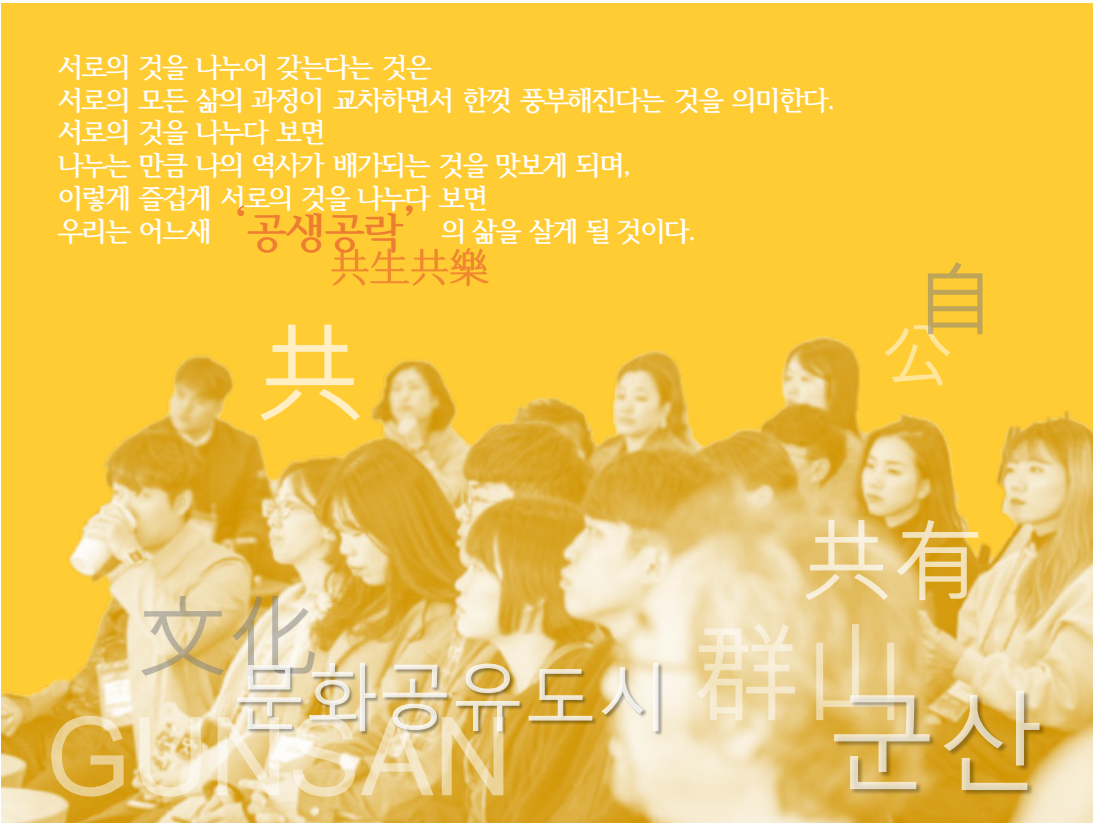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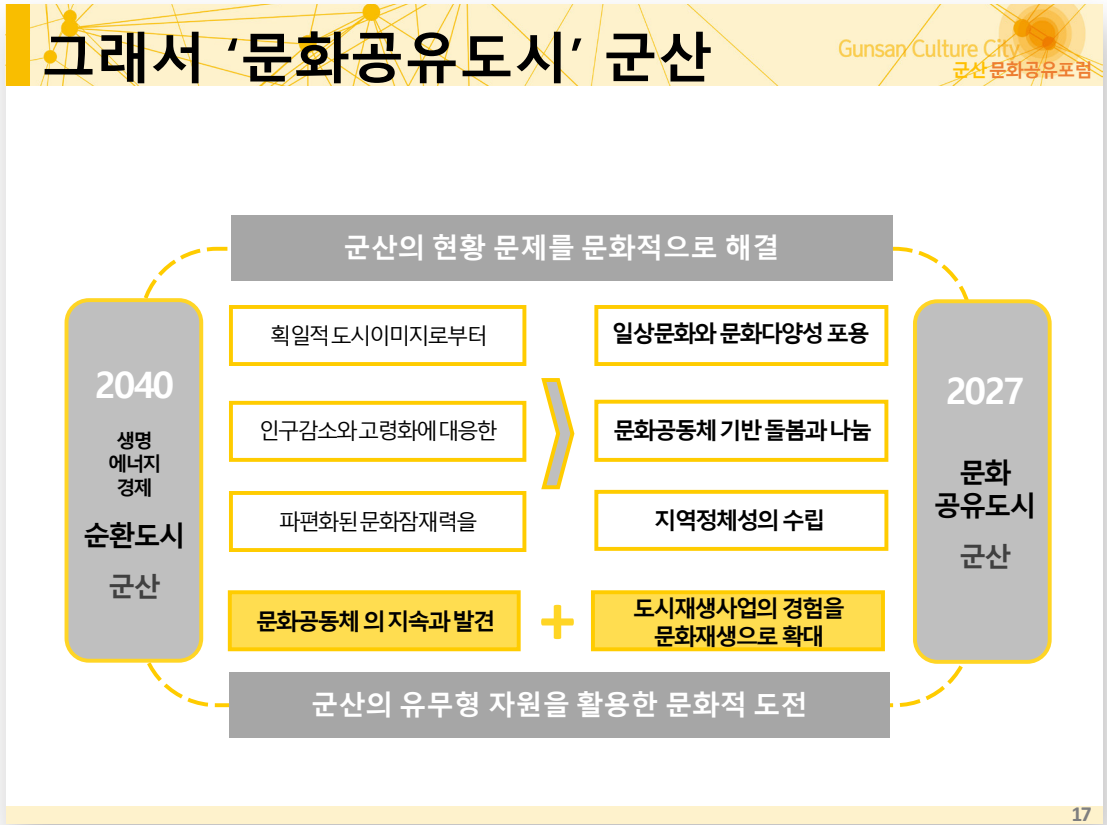
- 포용성(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가?)
- 개방성(자원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 차등성(사회적 약자 우선)
- 풀뿌리 민주주의(수평적·다중적 협력 거버넌스)
- 상호연결성(자원순환과 공동생산을 위한 연결과 협력)

공유시장 도시	공유이미 추진력 가치 목표 효과	시민공유 도시
셰어링 sharing 유무형 자원 할당 및 매칭 효율성 편리성 도시자원 효율적 공유 4차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커머닝 communing 시민자율의 호혜적 관계 협동주의 공동생산 시민 공동자원 관리 도시문제 해결 도시전환 시민참여

15

4

그래서 문화공유도시, 군산



제2부 패널토의 및 질의답변

1 공유 개념과 문화도시사업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군산의 문화도시 비전과 실천

오진이 | 금천문화재단 대표

3 지역문화와 문화공유

원도연 | 익산문화도시센터장

4 군산 현황과 문화도시 실현 정책

김봉곤 | 군산시 문화관광국장

공유개념과 문화도시사업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유개념과 문화도시사업

문화도시란 도시가 갖는 문제들을 문화적 가치와 실천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이다. 도시가 침체 위기를 겪고 있거나 혹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각 도시는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으로 문화창의력과 도시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시민의 삶이 도시가치로 구체화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한 일련의 운동이 문화도시의 속성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각 도시는 제일 먼저 그 도시가 가지는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도시 안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실천이 있었는지 등 도시에 대한 이슈 분석을 우선 하게 된다.

정영신 발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릴리 예’(Lily Yeh)가 북필라델피아 페어힐 지역에서 발견한 도시 이슈는 슬럼화 된 도시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으며, 서울시의 ‘공유도시 서울’은 공동체성의 심각한 붕괴라는 도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오랜 전통의 공유문화를 회복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산이라는 도시가 문화창의력과 도시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활을 지향하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게 된 도시 이슈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자. 군산이 발굴한 도시 문제와 도시 이슈는 무엇이었기에 ‘공유’를 통한 문화창의력과 도시가치 구현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인지, 군산은 왜 공유개념을 등장시키게 되었는지, 군산의 어떤 도시 이슈가 공유의 실천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게 했는지 등으로 논의를 좀 더 좁혀 볼 수도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문화도시의 출발은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하기 위한 도시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군산 예비문화도시사업은 ‘공생공락의 공유도시, 군산’을 지향하고 있다. 박학래 발제자의 발표에 따르면 군산 문화도시사업이 추구하는 ‘공생공락’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시장체제, 특정 집단의 지배와 독점 등 시민의 삶을 저해하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들이 삶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공정을 기초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삶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군산 예비문화도시사업은 군산 시민 모두를 문화주체로 발굴하여 ‘일상모임과 가치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군산 문화도시사업이 추구하는 도시가치는 무엇인지, 왜 그러한 가치가 도출되었는지, 또 그 가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

성계획 수립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출된 지향이며 비전이지만, 솔직히 왜 일상모임과 가치나눔을 하는 것이 군산에서는 중요한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구현된 공생공락의 문화공유도시 군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지속가능해진 군산의 모습은 어떨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그 전략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구체성이 부족한 듯하다. 다소 불편하지만 그동안 문화도시를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한 많은 도시들을 들여다보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을 돌이켜보았을 때, 군산도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조심스럽게 속내를 꺼내보았다.

문화공유도시라는 개념과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 한 군산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제각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때면 매번 다른 해석과 잣대가 등장하여 사업의 진행이 잦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1년차, 2년차, 3년차를 지나는 다른 도시들이 한 번씩 갈 길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군산은 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지, 군산은 공유를 통해 어떤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도시가치는 무엇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근거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도시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노력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진정한 자세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군산이 예비문화도시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수고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대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되뇌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점을 알려드린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으며, 그 수고가 군산이라는 도시를 문화로 혁신하는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군산의 문화도시 비전과 실천

오진이 | 금천문화재단 대표

문화도시 군산, 비전과 실천 : 공생공락의 작은 경험치도 공유되는 예비문화도시사업을 바라며

최근 2022년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인 ‘문화공유대학’의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네문화카페, 동네문화추적단, 동네문화지기 등 핵심 멤버 23명의 수료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보았습니다. 먼저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군산문화도시센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예비문화도시사업 관련 소식을 보며 다양한 지향을 가진 공동체의 부지런한 활동과 이를 전폭 지원하는 센터의 노고에 놀라움을 느끼곤 합니다. 같이 살고 같이 즐겁자, ‘공생공락’이라는 군산 문화공유도시의 비전이 정말 사업의 현장에서 조금씩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좋은 사업과 경험들이 단지 사업 참여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더욱 확산되어 보다 많은 군산 시민들이 공생공락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이제 갓 시작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수도 있지만, 하는 사람만 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사업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은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군산 또한 시민 모두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 일상을 사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주체가 되고 문화공동체가 될 수 있는 예비문화도시사업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반가움을 표하며 저는 하나 더 도움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은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준비하며 군산 문화도시의 비전 및 조성계획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의 도시문화환경에 대한 진단 및 분석, 천여 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기본 방향성과 구체적인 비전 및 핵심 가치 등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공유를 통해 문화주체로서의 시민과 문화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예비문화도시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도움말은 군산 문화도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전념하느라 자칫 간과하기 쉬운 시민 대중과의 소통과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군산 예비문화도시사업은 다양한 문화주체, 문화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문화공유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나누기 위한 문화공유대학, 문화공유포럼 등의 대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커먼즈, 문화공유 등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어색하고 낯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가치들을 추구하는

문화도시사업이니만큼, 이러한 개념들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강연과 논의 등이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시민 대중에게 문화공유라는 개념은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정도 심리적 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예비문화도시사업이 일부 사업 참여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군산 시민 대중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언어, 익숙한 사용감이 있는 생활 언어로 ‘문화’와 ‘공유’가 이야기되고 ‘문화공유도시’의 가치가 체감이 되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사적인 개인의 관심과 여가라고 생각한 내 일상이 어떻게 일상 문화가 될 수 있는지, 그 일상 문화가 이웃과 공유되면 내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일상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또 문화를 공유하는 도시는 왜 지속가능한지 등등 일상 문화, 공유, 문화공유도시에 대한 직관적인 질문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전달력이 좋은 매개체를 통해 군산 구석구석에서 시민 대중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공유도시 군산에 대한 시민 대중의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공생공락의 작은 경험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층 대중화된 예비문화도시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문화와 문화공유

원도연 | 익산문화도시센터장

지역문화와 문화공유 : 문화도시로의 여정과 공유의 가치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적 정의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문화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발전과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 하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이렇듯 고고한 이상을 품고 있지만, 2022년의 현실에서 문화도시는 치열한 도시 간 각축의 현장이다. 긍정적 의미를 찾자면 도시 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의 지자체들과 단체장들이 ‘문화란 무엇인가’ 혹은 ‘도시의 문화적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하나 더 꼽는다면 지난 십 수 년 간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현장 활동가들에게 일종의 ‘꿈의 오디션 그라운드’가 열렸다는 점이겠다.

확실히 2019년에 시작한 문화도시 정책은 한국의 그저 그런 도시들에게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남기고 있다. 2021년 꿈꿨던 예비도시들 간의 경쟁을 거쳐 온 익산문화도시의 경험에서 보자면 문화도시의 성패¹⁾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갈렸던 것 같다. 첫 번째는 그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원이 얼마나 특별한가, 두 번째는 특별하지는 않아도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있는가이다. 첫째, 도시의 문화적 특별함은 문화도시가 3차 년도에 접어들면서 갈수록 예민해졌다. 처음에는 그 도시의 역사성, 공동체성, 비극성 등 각 도시가 겪어왔던 공통의 경험치들만으로 호감을 얻었지만 특별함의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다른 도시에 없는 정말 특별함이 있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을 때 이 엄정한 테스트는 통과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화적 자원의 조직화에서 핵심은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얼마나 잘 조직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느냐의 문제라고 하겠다.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중의 하나는 ‘도시의 혁신’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를 통해 도시를 혁신’ 하라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가 표방했던 지역혁신체계(RIS)가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통해 지역을 바꾸자고 했다면,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지역을 혁신한다는 문화혁신체계 정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문

1) 문화도시를 이렇듯 성공과 실패로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먼구스러운 일이다. 사실 문화도시가 아닌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 모든 도시는 사람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그 도시의 문화를 갖고 있는 법이다. 다만 그것이 도시의 정책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느냐 못하느냐의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의 문화도시 정책은 사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화도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정책가치는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에 가깝다. 9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이 차별 없는 문화향유권의 확대에 대표된 ‘문화민주화’로 설정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화민주주의는 단순한 문화예술의 향유라는 관점을 넘어서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민주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기존 문화단체와 기구를 강화하면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의 향유를 강조한다. 이에 반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를 문화단체와 전문가들만의 영역에서 밖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문화민주주의에서 주창하는 다양성은 문화를 예술활동 중심으로 좁게 설정하는 단일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의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 삶의 질, (사회)발전, 과정중심 등이다. 문화도시시는 이처럼 문화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2022년 군산문화도시가 도시문화의 가치로 삼은 ‘공유도시’의 개념은 매우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21세기 탐욕적 자본주의의 뜨거운 질주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온갖 글로벌한 사회문제를 탄생시키고 있는 이 절실한 시점에 ‘공유’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뜻하지 않게 겪어야했던 코로나19의 시대는 거꾸로 ‘탈성장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먼 훗날 21세기 역사에서 ‘전환의 씨앗’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유도시’는 탈성장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도시문화의 새로운 씨앗이다. 공유도시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농촌의 소도시들은 물론이고 십수년의 침체와 저발전을 겪으며 모호하기 짝이 없는 도시성장의 상태에 놓여 있는 모든 중소도시들이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야 할 미래의 도시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공유’라는 개념은 도시의 공동체성과 포용성을 도시의 문화로 정립해가는 본질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공유문화’를 넘어 ‘문화공유’를 지향한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공유문화가 사회적 가치의 물적 교류와 공동체적 확산을 포괄하는 사회적 차원을 의미한다면, 문화공유는 커먼즈(Commons)로 상징되는 도시의 가치와 지향에 시민들이 합의하고 그 속에서 도시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자는 ‘공생과 공락’의 정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끝없이 ‘희소가치’의 창출을 통해 시장을 지배한다면 커먼즈는 ‘풍요’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다. 커먼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갖고 있으며 결국 이것을 함께 갖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도시가 이러한 가치에 시민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전략을 성공시킨다면, 특히 문화도시가 이러한 도시의 지향성을 드러내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한다면 그 도전은 문화도시를 넘어 도시혁신의 뜻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군산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사회혁신’의 중요한 선택지를 ‘커먼즈’의 정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이 문화공유가 지역문화와 의미 있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포럼의 구성과 개요를 보는데 문화공유가 ‘문화민주화’의 단계에 머물러 문화향유권의 확대라는 소극적 관점에 놓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군산은 이미 수년 전부터 커먼즈의 관점에 입각한 중요한 사회적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먼즈의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는 남아있다.

첫째는 문화공유의 정확한 개념과 지향성이다. 지금 ‘공유’ 혹은 커먼즈라는 이 일상적이어서 할 개념은 매우 현학적인 단계를 넘어 아주 복잡한 사회경제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군산의 공유문화가 이 현학과 화려한 수사의 함정에서 벗어나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익산의 사례를 보는데 문화도시의 가치와 지향을 학문의 단위에 묶어둘수록 시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문화도시는 대상화될 수 있다. 가능한 개념설정을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산의 사회적경제를 강력한 우군으로 두어 커먼즈의 정신과 지향을 미래의 과제로 두고 오히려 ‘공생과 공락’이라는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군산과 익산의 선택은 매우 대조적이다.²⁾ 익산의 사례를 돌이켜 보자면 익산이 내세운 ‘보석문화도시’는 공유도시와 달리 물성화된 대상이 명확했다. 익산문화도시는 ‘보석 특성화’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전환하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군산은 거꾸로 공유문화라는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추상에서 구체로’ 전환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공유문화는 결국 시민들 스스로 공공의 영역에 진입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의 독자적인 선택이 아닌 공동체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존에 그 질서를 규정하던 공공의 역할이 시민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³⁾ 이 점은 문화도시의 지향점과 완전히 일치한다. 문화도시시는 시민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갖게 되고 어떤 결정권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문화도시시는 본래 정책적으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 굳이 따지자면 정부가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서 해

2) 우리는 아직 익산의 사례를 문화도시의 성공모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익산은 이제 도시가 가야할 먼 길에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 여전히 불안정하고 부족하기만 하다. 2021년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된 것은 천운이지만 그것이 곧 익산이 문화도시로서 앞서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3) 최근의 ‘공유’ 이론과 활동들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등과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자원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기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의 공유논의에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야 할 수많은 일들을 문화도시에서 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⁴⁾ 그래서 문화도시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도 결국 공공의 영역과 만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문화자산은 가장 기본적인 공유 자산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군산은 문화공유와 도시문화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물리적 장소를 ‘동네’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은 익산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문화도시들 모두가 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런데 공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디지털 커뮤니티다. 아래로부터 시민주체와 자율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는 디지털 커뮤니티의 현재 모습은 시민적 참여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장한 (법정)문화도시들 중에서 디지털 커뮤니티가 문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으로 떠오른 사례는 없었다. 디지털 커뮤니티와 문화공유의 성공적인 결합은 문화도시 사상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실천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앞으로 모든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도 역시 디지털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셋째, 문화공유가 현실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의 문화자산들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포괄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 공유의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공공의 자원을 공유의 관점에서 시민사회(문화도시)에 제공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다른 공공자원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나 도시재생, 다문화 등등을 문화도시의 영역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문화도시가 시민문화를 생산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해내면 공공은 그것을 강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연결하고 제공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중간지원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문화도시 자체의 역할 만이 아니라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4) 이러한 방식이 그르다거나 공공이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 쉬지 않고 등장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공공이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2000년대 이후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한계에 부딪치면서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대평가(overvalue)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군산 현황과 문화도시 실현 정책

김봉곤 | 군산시 문화관광국장

군산의 현황과 문화도시 실현 정책

군산시 문화정책 현황

군산시는 군산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의 문화정책은 일상문화의 공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문화 공유 및 청년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도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원도심 내의 근대역사 건축물을 활용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근대역사 공간 및 교육의 장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와 2008년 군산시 경관 조례를 바탕으로 내항지역의 「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이 시행되었다. 2014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 확산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5개년 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시 자체 예산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도시거리사업, 문화예술공간사업, 문화예술고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신흥동 '말랭이마을'을 집중 조명하며 시행함으로써, 문화도시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군산시가 진행한 대표적인 문화사업은 「동네문화카페」라 할 수 있다. 동네문화카페는 2018년 평생학습사업으로 출발해 시민에게 학습의 기회 제공, 학습 일자리 창출, 동네 상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다분포 공공시설 활성화에 기여하며 매년 500여개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스템을 병행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네문화카페」는 군산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공동체로 발전을 모색하며, 문화도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사회 문제, 환경, 다문화, 여성, 공동체 등 다양한 문화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는 분산되었던 관련 부서를 군산시 문화관광국 내로 통합 배치하는 행정조직의 혁신을 이루었다.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의 연계를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함께 고려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시행 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하드웨어 및 관광 지향적 성과를 문화 재생으로 전환함으로써, 군산의 정체성을 살린 통합적 도시재생을 역점 사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시는 문화도시사업에 시민 참여와 문화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진정한 문화 협치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문화

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을 통해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 문화도시 정책 방향

민선 7기 이후 군산시의 시정목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다. 시민이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의 확립을 이루어 내려는 군산시의 시정목표는 민선 8기의 출범을 앞둔 현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산시의 정책적 목표이다.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산시는 시의 정책 방침을 1) 시민이 만드는 자치 도시, 2) 모두가 잘사는 경제 도시, 3) 문화가 흐르는 관광 도시, 4) 골고루 누리는 행복 도시, 5) 더불어 쾌적한 안전 도시로 설정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어떤 순간에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행복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군산'을 이룩하는 것이다.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예술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매력 있고 머물고 싶은 미래형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정 방침에 따라 군산시는 2022년 올해를 '문화예술 중심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군산시는 문화도시로서 군산의 위상을 확보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왔다. 시의회와 함께 2020년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부터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21년 4월 '군산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조성계획수립 TFT'를 구성하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행정적 조력자이자 거버넌스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며 군산시가 2021년 12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데 최선을 다했다.

2022년은 군산시가 본격적으로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이다. 성공적인 예비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는 지난 3월 군산문화도시센터 출범을 주도하는 한편, 시민 참여와 민간 주도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산문화도시센터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운영위원과 지역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군산대학교가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문화도시사업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시민-군산문화도시센터-군산시의 거버넌스 기반 문화도시사업의 비전 실천 노력이 2022년 12월 법정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문화도시사업의 비전이 추구하는 '문화공유'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문화공유'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군산시가 '문화공유'에 공감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것은 문화도시사업이 단순히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의 확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통로가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산시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현안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군산 지역에 불어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은 취업난 가중, 경제 지표 악화, 인구 유출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감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며, 특히 '공유'라는 가치의 실현을 문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사업은 군산시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한다. 앞서 밝힌 대로 '자립도시'를 추구하는 군산 시정목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지속해서 참여하여 진정한 시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도시 사업은 시의 방침과 궤를 함께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군산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하여 본 문화도시 진입에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행·재정적 지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시민력의 강화, 모으고 나누는 문화공동체의 조성, 그리고 공유가 실현되는 문화공유도시로의 정착을 위해 군산시는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배제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측면에서 돕고자 한다.

MEMO

2022
공생공락을
위한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함하여